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기업주들에게 대한 특혜일 뿐이다

» 관련 기사 12면



문재인 정부의
경찰 개혁
아무런
진보성도 없다

2면

더욱 심화되는
문재인 정부의
위기

3면

월성 핵발전소 감사 결과 논란
핵 산업·무기개발 약화
막으려는 우파의 공격

4면

엔겔스 탄생 200주년
엔겔스가 파헤친
여성 차별의 기원

6~7면

미국 대선 이후

8~9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
일자리 불안 키우면서
대기업에겐 막대한 특혜

12면

국제
폴란드 낙태권 운동,
정치적 반향 얻다

10면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갈등

9면

문재인 정부의 경찰 개혁에는 아무런 진보성도 없다

김승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적 과제 하나는 검찰의 수사종결권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옮겨 경찰을 강화하는 것이다.(다른 하나는 검찰의 권력형 부패 수사 권한을 공수처로 옮기는 것이다.)

검찰, 경찰, 국정원 모두 비민주적 악행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운데 그중 하나인 경찰을 강화하는 게 과연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지부터 의문이 든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더 나쁘다. 경찰의 규모와 권한은 늘어나는 반면, 검찰 개혁은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막으려는 꼼수에 불과했음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 약화는 안 그래도 보잘것없는 수준이었었는데 그조차 후퇴하고 있다.

자치경찰

정부·여당은 경찰 강화뿐 아니라 경찰 권력 분산도 '개혁' 과제로 함께 추진하겠다고 한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다.

경찰을 국가경찰과 시·도 자치경찰로 나누고, 이 중에서 행정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해서 후자는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가 지휘·통제한다는 게 골자다.

쉽게 말해 경찰청이라는 한 지붕 아래 여러 가족을 뒤 권력을 분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자치경찰제 도입을 지지해 온 온건 NGO들조차 정부 안을 즉각 비판했을 정도로 그 실효성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 경찰 서열 꼭대기에 있는 경찰청장이 각 조직의 인사권 등 핵심 권한을 쥐고 있는 위계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에서 자치경찰제가 처음 도입되는 것은 아니다. 2006년 노무현 정부가 제주도에서 실험적으로 도입해 지금까지 운영중이고, 그 밖의 4개 시도에서도 운영 중이다. 그러나 그동안 경찰이 좀 더 민주적으로 개선됐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없다.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자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정권의 부패를 감추고 경찰력 강화를 정당화하는 문재인 정부

치경찰제 관련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오히려 경찰력 비대화를 포함시켰다. 전국 200개 넘는 자치경찰대를 신설하는 대신 국가경찰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을 삭제한 것이다. 이로써 이미 총원 14만 명에 이르는 공룡 경찰이 몸집을 또 키우게 됐다. 관리자급 인력만 곱절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경찰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자치경찰이 주민의 기초적 생활과 밀접한 업무만 담당할 것이기 때문에 국가경찰과는 구분된다고 한다.

그러나 국가경찰이든 지역·자치경찰이든 지배계급의 입장에서 기존 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몽둥이라는 본질은 다르지 않다.

예컨대 자치경찰제가 잘 발달한 나라로 꼽히는 프랑스에서 노란조끼 시위가 분출하자 국가경찰이 직접 진압과 검거에 나섰다. 그동안 자치경찰은 '시위자들의 악탈 행위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진압에 동참했다. 미국에서도 흑인 시위를 일선에서 폭력 진압한 경찰은 지역·주 경찰들이었다.

그러므로 "자치경찰"은 지방 정부

로 통제권이 조금 분산된다는 것을 말할 뿐이다.

이번 정부·여당의 자치경찰제 법안도 자치경찰이 국가경찰과 동일하게 무기를 휴대·사용할 수 있고 긴급 체포권 등 초동조치권을 갖게 했다.

지원된 경찰 수만큼 경찰 폭력의 위험도 커질 수 있음을 심각하게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

국정원 '개혁'

정부·여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것을 두고 국정원 개혁이라고 한다.

국정원 대신 경찰은 대공수사를 명분으로 활개쳐도 된다는 것인가? 박종철 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 바로 경찰의 대공수사였다.

최근 수년간 국가보안법 사범 입건은 국정원이나 검찰보다 경찰이 훨씬 많았다.(물론 중대 사건들은 국정원이 주도했다.) 예컨대 2017년 국가보안법으로 입건된 42명 중 41명이 경찰에 의한 것이었다. 그중에는 사상 자체를 차별하는 조항인 7조 1항 찬양·고무죄 사범만 26명에 달했다.

정부의 국정원 개혁안은 경찰 내에서 국정원과 비슷한 임무를 수행하는

정보·보안국을 확대 강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벌써 경찰은 수십 명의 경력직 안보수사관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를 대부분 국정원 직원들이 차지하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다.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는 대통령이 경찰의 대공수사권 강화를 추진하면서 '개혁'으로 치장하는 것은 메스꺼운 일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정원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경찰 강화를 반대한다기보다 국정원이 기존 기능을 유지하는 게 낫다고 보는 듯하다. 우파 정부들은 대선 개입(이명박)이나 통합진보당 해산(박근혜) 등에서 국정원을 요긴하게 활용해 왔다.

민주당은 우파 야당과 협상하기 위해 국정원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기로 한 약속(국내정치 개입을 금지한다는 의미)을 철회했다. 그리고 국정원에 대공·조사권을 남겨 두거나(이렇게 되면 경찰·검찰과의 협조 속에 국정원의 은밀한 만행은 계속될 것이다), 대공수사권 이전을 3년 유예하는 안을 내놓고 있다.

대국민 거짓말

검찰과 경찰, 국정원(정보기관)은 자

본주의 국가의 핵심적 일부이자 자본가 계급의 억압 도구이다. 이 수사·정보 기관들은 합법적인 폭력과 처벌, 감시 권한을 독점함으로써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고 자본주의 국가 기구를 수호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다.

그래서 한국뿐 아니라 미국 등 모든 자본주의 나라에서 중앙정보부 CIA와 연방수사국 FBI, 프랑스의 대외안보 총국 DGSE, 영국의 MI5와 MI6 등 정보기관과 보안경찰들은 경쟁 국가와 국내 저항세력에 대한 감시와 사찰을 벌인다.

이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를 그대로 둔 채 검찰, 경찰, 정보기관을 억압받는 계급들에 이롭게 개혁한다는 것은 공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 국가의 평상시 수장인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주의 운운하며 권력기관 개혁을 내세운 것도 처음부터 진정한 민주주의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지배계급 내 권력 쟁투를 위한 것이었다. 특히, 권력기관 개혁 드라이브가 조국 사태를 비롯해 정권 연루 부패 의혹이 터지자 불 붙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보면 위선적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가 경찰력 강화에 속도를 내는 것은 역대 정부의 임기 말 정치적 통제 강화 시도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과거 정부들도 정권의 위기가 심해질 때 (성)범죄 근절 운운하며 경찰력을 강화하고 서민층 분위기를 경색시키곤 했다.

코로나19는 문재인 정부에게 특히 좋은 명분이 되는 듯하다. 정부는 대중의 건강보다 경제 침체를 우려하면서 방역 단계를 선불리 낮췄다가, 상황이 악화되면 책임을 애먼 데로 돌리며 권위주의적으로 행정을 강화하기 일쑤다. 최근에는 경찰버스와 병력을 동원한 집회 봉쇄도 서슴지 않는다.

코로나19로 인한 정치·경제의 위기가 심해질수록 지배계급은 경찰력에 더욱 의존해 기층 정서를 통제하려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찰 '개혁'에는 (검찰 개혁처럼) 어떤 진보성도 없다.

노조 결성 지지가 “국가 전복 선동”?

마르크스주의자 탄압하는 중국 정부

김종환

중국에서 노동자 투쟁 연대에 앞장섰던 마르크스주의 활동가 차이샤오밍이 가혹하게 탄압받고 있다.

차이샤오밍은 “국가 전복 선동” 혐의로 비밀 재판에 회부됐다고 한다. 이런 비밀 재판은 피고의 변호사 선임권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초보적인 사법요건도 갖추지 못하기로 악명이 높다. 8월 14일 재판에서 검사가 3~5년 형을 구형했다는 사실만 최근 알려졌다. 반

면 판결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더욱이 차이샤오밍은 기소도 되기 전인 지난해 3월부터 공안 당국에 구금돼 있다. 정식 재판을 받기 전에 이미 17개월이나 구금된 것이다! 또한 당국은 그를 구금한 지 반년이 지나고 나서야 정식으로 그를 “체포”했다. 이번 탄압 소식을 보도한 현지의 좌파매체 <중귀라오공문탄>(중국 노동자 난단)은 이처럼 정치수들이 정식으로 체포되기 전에 구금당한 상태에서 “자백”과 “협조”를 강요당하기 일쑤라고 전했다.

또한 이 매체는 차이샤오밍이 탄압받는 진정한 이유가 2018년 자스커지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 투쟁에 연대한 것과 관련 있다고도 전했다. 차이샤오밍이 편집장으로 있는 인터넷 언론은 당시 자스커지 투쟁을 알린 주요 좌파매체 중 하나였다.

주요 산업 지역인 광둥성 선전에서 벌어진 이 노동자 투쟁의 잠재력을 우려한 중국 정부는 당시 투쟁했던 노동자들과 그에 연대한 학생·청년 활동가들을 수년째 집중적으로 탄압하

고 있다(관련 기사: 본지 267호 ‘중국 정부가 노동자·학생 운동 탄압을 강화하다’). 반면 자스커지 사측의 주요 인물들은 중국공산당이 임명한 “선전시 인민의 대표”들이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그에 대한 탄압에 항의해 온 마르크스주의자가 “국가 전복 선동” 혐의로 처벌받는 현실을 보면 중국 국가가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자 착취와 노동자 투쟁 통제에 혈안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차이샤오밍은 즉각 석방돼야 한다.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영국 '실세' 총리 수석보좌관 해임 — 정부 실태 드러난 편리한 희생양

★ 비정규직 공무원 수당까지 빼앗는 정부와 지자체

추미애 법무장관이 부른 역풍과 문재인 정부의 위기

김문성

문재인 정부는 7월 이후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지 못하고 있다. 개혁 배신에 대한 실망과 반감이 지지층 이반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40퍼센트 대로 추락해 수개월간 반등의 기미가 없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더 높은 여론 조사도 여럿이다. 내년엔 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서울·부산에서 지지율이 부진하고 윤석열이 급부상하는 것도 정부·여당에 불길한 조짐이다.

경제 상황이라도 좋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경기 침체와 기업 부실화, 미·중 갈등과 국제 질서 불안정, 부동산 폭등 후유증 등의 악재들이 정권을 괴롭히고 있다. 미국의 정권 교체(또는 그 지연) 상황도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높이는 듯하다.

정권 실세들의 부패 의혹과 그것이야기한 청와대-검찰 갈등, 우파의 견제로 불거진 경북 월성 핵발전소 폐쇄 관련 감사원 보고서 파동도 악재다. 조국·김경수 등 정권 실세이자 친문 차기 대선 주자들이 모두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선진국 정부들이 코로나19 대처에 대실패한 덕분에 큰 반사이익을 얻었지만 지금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경제 활성화와 대입 수능 등을 염두에 두고 추석 이후 코로나 방역을 완화했다가 11월 중순에는 감염자가 하루 300명이 넘는 수준으로 급증했다.

한편, 감사원의 월성 핵발전소 폐쇄 감사를 둘러싼 갈등이 검찰 수사로 변진 것은 검찰의 보복성 수사로 보인다. 우파는 핵무기 보유나 핵발전소 수출 등에 해롭다는 이유로 일관되게 핵발전소 폐쇄에 반대해 왔다. 그리고 폐쇄 추진을 중단시킬 수 있는 감사원의 관련 감사를 응원해 왔다.

월성 핵발전소 폐쇄는 탈핵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공약을 거둬들이면서 엔지오 지도자들을 달래기 위해 상징적 차원에서만 시행하려 했던 것이다.(핵발전소 해체 산업 육성 목표도 있다고 한다.) 검찰 수사 등으로 문재인 정부가 폐쇄 입장에서 후퇴한다면, 포퓰리즘적 기반에 추가적인 이반과 균열이 생길 것이다.

항공사 구조조정

문재인 정권은 최근 여러 위기 수습책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아시



문재인 정부는 위기 탈출을 위해 경제 활성화에 매달리고 있지만, 정치적 위기가 깊어지는 것을 피하지는 못할 것이다

아나항공을 한진그룹 대한항공에 넘기는 것이다. 이미 정부는 아시아나항공에 5조 7000억 원, 대한항공에 1조 2000억 원을 투입한 상황이다. 일시적으로 화물 운송을 늘리면서 실적을 일부 회복하긴 했지만, 팬데믹 상황에서 항공사들의 수익성 회복 전망은 불투명하다.

정부는 현 상태에서의 지원이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으므로 아예 합병을 시켜서 규모의 경제 효과로 경쟁력을 키우는 게 그나마 회생에 낫다고 보는 듯하다. 4년 전 박근혜가 한진해운을 파산시킨 것처럼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2016년 당시 박근혜의 해운업 구조조정은 레임덕의 신호탄이었다. 재계는 박근혜 정부가 수출 기업들이 급할 때 의존할 수 있는 한국 국적의 해운업체 1위 기업을 구하지 않은 것에 불만이 많았다.(최근에도 수출 기업들은 단기적 선박 부족을 호소했다.) 재벌을 구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것이다. 부산 지역 경제에도 타격을 줬 지역 여론이 박근혜에게서 등을 돌렸다.

산업은행의 결정은 재벌과 주주들에 대한 특혜 결정이기도 하다.(한진그룹 경영권을 놓고 다투는 조원태나 아시아나항공 부실의 책임을 지지 않은 박삼구 등은 오히려 손실을 줄이고 이득을 본다.) 노동자들은 구조조정 위협에 즉각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항공 직원의 다수를 포괄하고 있지만 우파적인 대한항공노조는 인수합병에 찬성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이번 조처는 만만찮은 여러 세력 간 갈등의 시작일 수 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대주주 특혜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일부 나온다.

김해 신공항과 보궐선거

김해 신공항 계획을 폐기한 것도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결정이다. 영남권 신공항 계획은 그 부지의 위치 문제로 대구·경북권과 부산·경남권이 수년간 갈등해 온 사안이다. 김해 안은 이 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두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일 때 박근혜가 절충안을 내서 추진한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도 골치아픈 사안이라서 이를 건드리지 않아 왔다. 그런데 내년 부산시장 선거 전망이 불투명하자 기존 계획을 철회한 것이다. 김해 안과 경쟁했던 부산 가덕도 안을 밀겠다는 계산이다. 지역 민심도 얻고, 선거 프레임도 성취행 문제에서 비켜가 보려는 것이다.

김경수 경남지사나 부산시장 출마를 노리는 김영춘 등 민주당의 부산·경남 기반 정치인들이 정부 방침을 환영하며 부산 가덕도 계획을 지지한 이유이다. 국민의힘은 의견이 갈렸다. 대구시장 권영진이 앞장서 정부 결정을 격하게 반대한 반면, 서병수 등 부산시장 출마 예정자들은 환영하며 시급히 가덕도 추진을 공식화하라고 주장했다.

경제 위기 때문에 재정 문제가 첨예

한 쟁점인 상황에서, 10조 원 규모의 비용이 드는 신공항 개발 계획이 제대로 추진될지는 불투명하다.

한편, 이낙연은 부동산 정책에 “폐착”이라는 단어를 쓰며, 경영이 어려운 도심 호텔·사무실·상가 등을 청년층과 노년층 1인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개조해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내놴. 부동산 문제로 정부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는 서울의 선거를 의식한 발표로 보인다. 경영난을 겪는 중소 호텔들과 빌딩 임대업 문제와 주택 공급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보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해당 건물들 구입과 개조 비용이 추후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 그리고 그 정도로는 부족한 공급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에 있다.

차기 대선 1년 전에 치러지는 제1, 2도시에서의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는 차기 대선 국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여전한 검찰발 위험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11월 16일 국회에서 서울시장·대선 출마설에 대해, “검찰 개혁 전까지 정치적 욕망이나 야망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집권 세력에 대한 수사를 좌절시키고 윤석열을 쫓아낸 뒤 그것을 전리품으로 들고서 차기 권력자 자리에 도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청와대와 검찰 수뇌부의 갈등에서 청와대가 우위에 서는 것처럼 보였던 것은 추미애가 규

칙과 법, 관행 등을 무시하고 저돌적으로 수사 방해와 윤석열 무력화를 밀어붙인 탓이었다. 그 덕분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정권 실세들의 펀드 사기 연루 의혹 등 관련 수사가 모두 지체되거나 방향이 뒤틀려 있다. 정권은 이를 “검찰 개혁”으로 포장해 왔다. 권위주의 정권 이래 검찰의 부패하고 강압적 행태에 대한 대중의 반감이 크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부패 수사를 적폐로, 부패를 억울한 피해로 둔갑시키는 정권에 대한 반감과 환멸이 더 크게 자라고 있다. 청와대-검찰 갈등은 정권에 대한 평검사들의 반발로 확대됐고, 급기야 현직 검찰총장인 윤석열이 차기 대선 후보 선두권에 오르는 상황이 됐다.

이는 여권에게 단순히 강한 경쟁자 하나가 추가된 문제가 아니다. 집권 세력의 부패로 불거진 국가기관끼리의 분열이 심화되는 한편, 정권의 거짓말이 부패 혐의에 대한 의심을 덮지도, 지지층 이반을 막지도 못했다는 뜻이다. 윤석열 체내기가 더 어려워졌다. 당연히 설립 의도가 의심받으면서 공수처에 대한 지지도 약화됐다. 추미애가 윤석열 가족 수사로 압박을 확대한 이유다.(그런데 조국 때 여권이 그토록 개혁 대상이라던 별건 수사 방식이다.) 망신을 주어 쫓아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추미애의 무리수는 약발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추미애의 윤석열 검찰 지시를 간부 검사가 거부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한동훈을 쫓아내려던 시도도 결국 중립을 지키던 서울고검이 추미애 라인에 검사를 기소하면서 사실상 무력화됐다. 오히려 윤석열 라인 검사들이 포진한 것으로 알려진 대전고검이 월성 핵발전소 폐쇄 관련 건으로 우파를 등에 업고 보복성 수사를 새로 시작했다. 이반이 검찰 전체로 확대되고, 권력 누수가 벌어지면서 집권세력에 대한 수사는 오히려 재개되기 쉬워졌다.

여권이 갈수록 초조해진다는 것은 국무총리 정세균이 추미애와 윤석열을 함께 비판한 것에서도 드러났다. 민주당 중진인 국회 예결위원장 정성호가 국회에서 추미애에게 “정도껏 하라”고 공개적으로 핀잔을 준 것도 그런 심리의 반영인 듯하다. 친여 언론에서도 추미애와 윤석열의 동반 해임을 주장하는 의견들이 나온다. 정권이 당장은 윤석열 쫓아내기에 주력하겠지만, 정치적 위기를 피하지는 못할 것이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소속

() 직장 () 노조 () 대학교 () 종교동학교 () 기타

회비약정액 ☐ 2만 원 ☐ 3만 원 ☐ 4만 원☐ 5만 원 ☐ 기타 ()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 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가능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구독기간 ☐ 1년 ☐ 2년 ☐ 2년 이상 () 년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4909-2026, mail@workerssolidarity.org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6491-2792, ws@wspaper.org

월성 핵발전소 감사 결과 논란

핵 산업·무기개발 약화 막으려는 우파의 공격

장호중

10월 20일 감사원이 월성 핵발전소 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월성 1호기는 2019년 1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결정에 따라 영구 폐쇄됐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폐쇄 결정 자체가 타당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감사 범위가 아니었다”면서도 폐쇄 결정의 근거 중 하나인 경제성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됐다고 발표했다. 또 이 평가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며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산업자원부(산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당시 월성 핵발전소의 전력 판매 단가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해 사실상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또 감사가 시작되자 고의로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산자부 장관은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지는 않았다고면서도 관련 자료 삭제 등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해 감사 방해 행위를 일부 인정했다.

이 발표 뒤 우파 야당과 언론이 연일 정부에 팽공을 펴고 있다. 국민의힘은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대전지검 형사5부)은 폐쇄 결정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와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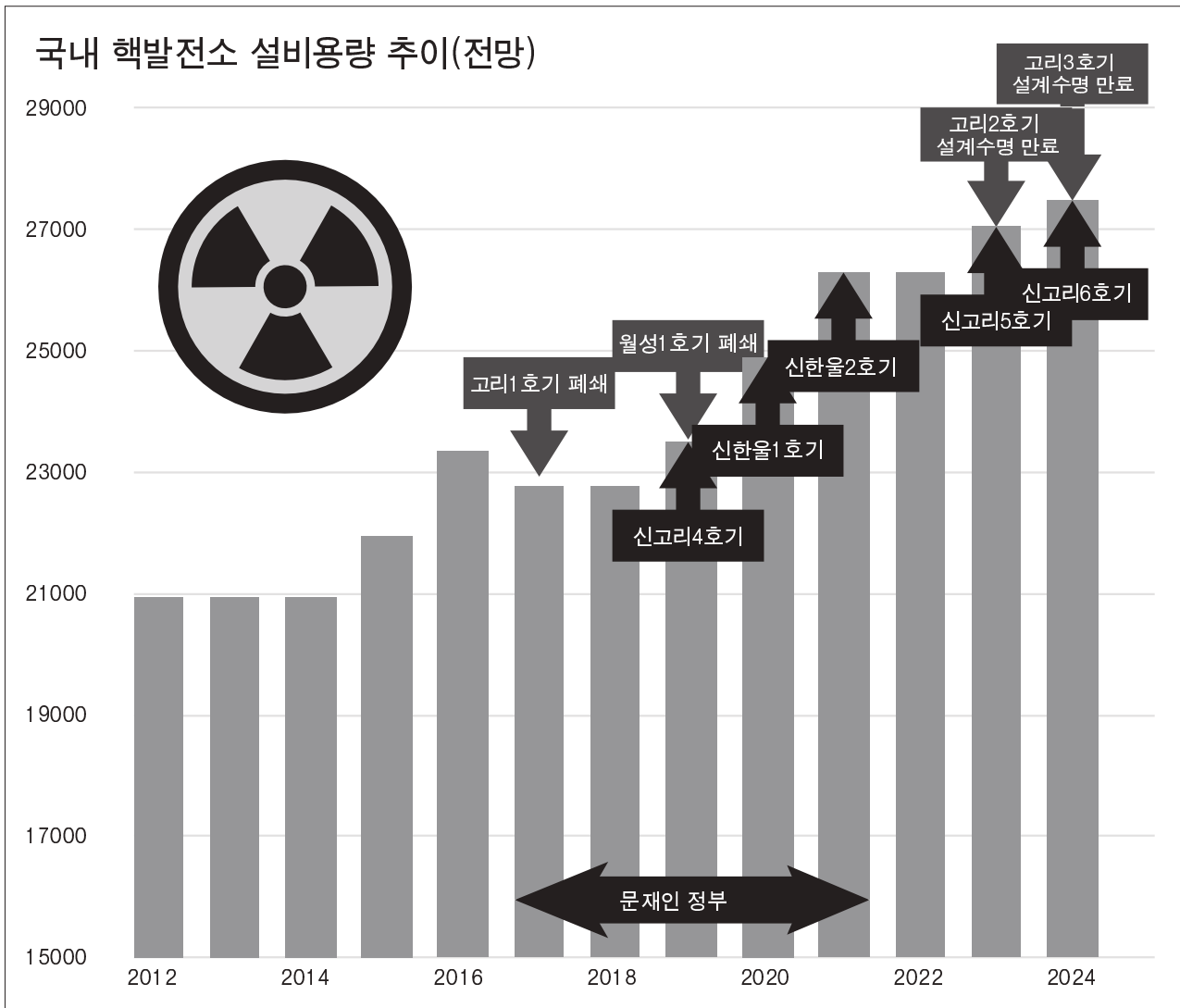
그러나 감사원이 평가했다는 핵발전소의 ‘경제성’ 자체가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예컨대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높이려면 비용이 늘어나고 따라서 경제성은 낮아지게 마련이다.

감사원은 폐쇄의 타당성 자체는 따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감사원의 경제성 평가는 핵발전소의 안전성은 확보됐다는 전제 하에서 이뤄진 계산일 것이다. 따라서 월성 핵발전소 폐쇄가 사실상 근거 없는 폐쇄였다는 발표인 셈이다. 우파 야당과 핵산업계가 기세등등하게 공세를 펴는 이유다.

그러나 핵발전의 근본적 위험을 고려하면, 경제성만으로 평가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안전성을 확보할 방법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핵폐기물은 수십만 년 동안 치명적인 방사선을 내뿜는다. 이를 인간 사회와 자연환경에서 안전하게 분리 보관할 방법은 없다. 현생 인류가 등장한 지 20만 년밖에 안 됐는데 어느 누가 핵폐기물을 수십만 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을 찾아냈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수십만 년’이라는 시간은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벌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빙하기 같은 기후 변화도 몇 차례나 올 수 있을 만큼 긴 기간이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나 1986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가 보여 주듯, 사고의 결과는 재앙적이다. 두 지역 모두 여전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양



‘탈핵’은 커녕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계속돼 왔다(신한울 1~2호기는 95% 이상, 신고리 5~6호기는 50% 이상 공정이 완료됐다)



월성 핵발전소. 오른쪽이 폐쇄된 1호기다

의 방사선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 후쿠시마에서는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냉각수를 태평양에 방류할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체르노빌은 지역 전체가 수십 년간 버려져 있다.

백번 양보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막는 데 필요했을 시설들 즉, 지진과 해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시설만 완전히 구축하려 해도 핵발전소는 수지타산을 맞출 수가 없다. 감사원의 계산법에 이런 비용은 들어 있지 않은 것이다. 심지어 월성 1호기는 설계수명 30년을 다 채우고도 박근혜 정부의 ‘수명 연장’ 결정에 따라 계속 운영돼 왔다.

경제성과 안전성

사실 감사원이 핵발전소 폐쇄의 ‘경제성’을 감사한다고 했을 때부터 애초 초 정해진 결론을 따라간 것이나 다를 없다. 정부의 공식 기관들이 수행하는 핵발전소의 경제성 평가에 앞서 말한 요소들이 포함될 리 없기 때문이

다. 그랬다면 애당초 핵발전소가 세워지지도 못했을 것이다.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9월 해당 정보를 확보하고 감사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이처럼 특정 산업이 장기간에 걸쳐 환경과, 궁극적으로는 인간에게 끼칠 어마어마한 위험이 간과된다. 개별 자본가들은 수십 년 뒤에 찾아올 위험보다 다음 분기의 이윤을 더 우선시한다. 설사 미래의 위험을 이해하고 있더라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자본주의는 이들의 이윤 경쟁을 동력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어떤 착한 자본가가 환경 비용을 지불하면, 그는 머지않아 시장 경쟁에서 밀려나 청정한 미래를 보기도 전에 퇴출되거나 빚더미에 나앉아 지옥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외부 비용’을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자본주의 국가는 자국 자본가들이 세계 시장에서 벌이

는 경쟁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 그것이 세계 체제에서 해당 국가의 경제적·군사적 지위에 압도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안전 비용을 무시한 핵발전 정책은 그동안 한국 자본가들에게 큰 이익을 안겨 줬다. 다른 나라보다 값싼 전기를 공급받아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다.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등 전통적 제조업뿐 아니라 정보통신 산업에서도 전기요금은 결정적 경쟁력이 되곤 한다. 오죽하면 값싼 전기요금 때문에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짓는 외국 기업도 많다.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1983년에 가동을 시작한 월성 핵발전소는 특별한 위상을 갖고 있다. 국내의 다른 핵발전소가 경수로인 것과 달리 월성 1~4호기는 중수로다.

“월성 1호기를 중수로로 결정한 것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핵무기 개발 계획과 연관되어 있다. 중수로의 사용 후핵연료는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더 쉽기 때문이다. 특별한 용도에 쓰기 위해 종류가 다른 핵발전소를 구입한 것이다.”(이현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

미국은 박정희의 핵무기 개발 시도에 제동을 걸었지만 그 대가로 핵발전 기술을 지원해 줬다. 물론 한국 정부의 핵무기 개발 시도는 그 뒤로도 계속 이어져 왔다.

핵발전소 해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문재인의 탈핵 사기극

문재인 정부도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공약했지만, 실제로는 자본주의 국가의 논리에 따라 핵발전을 늘려 왔다. 심지어 해외 수출과 핵무기 개발에

도 의욕을 보인다.

예컨대 신고리 4호기는 2019년에 발전을 시작했는데, 그 설비용량만 해도 폐쇄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를 합한 것보다 크다. 준공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신한울 1~2호기와 한창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까지 고려하면 폐쇄된 핵발전소의 규모는 사실상 효율성 제고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본지 226호 기사 ‘탈핵 공약 폐기,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핵발전소 수출 정책도 계속되고 있다. 더는 짓지 않겠다는 말은 하나하나 한 소리다.

역대 민주당 정권에서 핵무기 개발 시도가 이어져 왔음은 익히 알려져 있다. 문재인 정부도 핵잠수함 개발을 위해 미국 측의 동의를 얻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 최근 진수된 잠수함 안무함에는 핵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

이런 핵무기 개발에는 원료도 필요할 뿐 아니라 핵물질을 다루는 기술과 노하우도 필요하다. 핵발전은 이를 위한 필수 산업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각국의 핵발전소 운영을 치밀하게 감시하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가 이처럼 ‘탈핵’은 커녕 핵발전을 늘려온 것도 안전보다 이윤과 군사적 필요를 앞세운 것이었으므로,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모순적이게도 경제성 평가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다. 산자부 직원이 한밤중에 몰래 자료를 삭제하는 일까지 벌인 이유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고리와 월성에서 각각 한 개씩 핵발전소를 폐쇄한 것은 탈핵의 방향성에서 한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탈핵 시능을 하며 환경 엔지오 등 개혁주의 지도자들을 자신의 지지층으로 묶어 두는 한편, **핵발전소 해체 산업을 성장시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려는 시도**인 듯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5년 10월 제5차 원자력진흥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원전 해체 역량을 배양하고 미래 해체시장에 대비하기 위한 원전 해체 산업 육성 정책방향을 결정”한 바 있다.《원자력 정책》 2018년 5월호)

우파 야당과 언론, 핵산업계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말로나마 핵발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키우는 정부의 방식이 위험하다고 여기는 듯하다. 정부가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고 내놓고 감사를 방해했으니 지배자들 간의 룰을 지키지 않는 오만함도 불만의 소재일 것이다. 설계 단계에서 보류돼 있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이슈로 삼으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청와대와 갈등을 빚어 온 검찰은 이참에 약점을 쥐려 달려든 듯하다.

핵발전을 더욱 확대하려는 우파의 공세는 좌절돼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이에 맞서 탈핵을 추진하리라 기대할 수는 없다. 문재인 정부에 독립적인 탈핵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코앞으로 다가온 브렉시트 ②

정치 양극화, 코빈의 부상과 좌절

차승일

올 연말에는 지난 4년을 끌어온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 과정이 마무리된다. 지난 341호 기사 “브렉시트란 무엇이고 어떻게 결정됐을까”에 이어, 이번에는 브렉시트 상황 속에서 제러미 코빈이 노동당에서 부상했다가 좌절하는 과정을 다룬다.

브렉시트로 영국 정치가 출렁인 지난 4년은 노동당 내 좌파이자 사회주의자인 제러미 코빈이 부상했다가 좌절한 기간과 겹친다.

브렉시트 국민투표에 약 9개월 앞선 2015년 9월 12일 제러미 코빈이 압도적 차이로 노동당 대표로 당선됐다. 이는 기성 정치권에 감전 같은 충격을 줬다. 코빈이 이끈 노동당은 브렉시트 국민투표 1년 뒤에 열린 총선에서 민영화된 기업의 재국유화 같은 공약을 내걸고 큰 성공을 거뒀다. 영국 유권자 1200만 명이 코빈의 메시지에 호응했다.

코빈의 부상은 경제 위기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중의 반감이 좌파 정치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었다. 그리스 시리자와 스페인 포데모스가 성장했던 것처럼 말이다. 또, 코빈이 노동당 대표가 된 직후에 열린 난민 연대 집회에는 5만 명이나 참가했다. 그러므로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를 인종차별주의의 승리로 보는 것은 무척 일면적인 데다가 자신의 그릇된 편견으로 세상을 끼워 맞추는 어리석은 일이다.

현재 자본주의가 여러 겹의 위기를 겪는 와중에 세계 곳곳에서 정치가 양극화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특세한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적·정치적 힘이 크게 흔들리며 좌우 모두의 공격을 받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 신자유주의를 신봉했고, 신자유주의의 유지에 이해관계가 있는 기성 권력자들이 그냥 밀리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환멸은 더 커지고 대중은 더 좌로, 더 우로 시선을 돌린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정치 양극화의 주된 수혜자는 극우다. 신자유주의와의 단절을 주장하며 떠올랐던 급진 좌파들은 결국엔 실패했다. 그리스 시리자는 집권한 지 반년 만에 긴축 정책 추진자로 변하며 배신했다. 현재 스페인 연립정부에 포함된 포데모스도 마찬가지다. 2020년 11월 영국 노동당에서는 제러미 코빈이 축출 시도에 직면했다.

여전히 신자유주의에 헌신하는 기성 권력자와 자본가 계급에 대한 대중의 환멸과 분노가 어디로 향하게 할 것인가를 두고 벌어지는 투쟁이 최근 몇 년 동안 세계 정치를 규정해 왔다. 이 투쟁에서 좌파가 승리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가 코빈 등 급진 좌파의 성장과 좌절에서 배울 중요한 교훈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 사회주의자는 어떤 무대에서 어떤 정치로 어떻게 활동을 해야 할까?



제러미 코빈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과정에서 좌파 개혁주의 정치인의 장점과 한계가 모두 드러났다

코빈의 성장은 좌파 전체를 고무했다.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 좌파와 사회주의자가 고무됐다. 코빈의 부상은 사회주의 사상이 대중적 인기를 끌 수 있음을 보여 줬기 때문이다.

코빈의 성장은 시리자와 포데모스와는 차이점도 있었다. 시리자와 포데모스는 신자유주의를 수용한 주류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바깥에서 더 좌파적인 세력이 성장하는 모습이었지만, 코빈의 경우에는 정치적 시체 취급을 받던 영국 노동당의 안에서 성장했다. 그래서 노동당 바깥에서 새로운 좌파 정당을 건설하려면 시도가 중단됐다. 코빈 지지자 수십만 명이 노동당에 입당하는 흐름과 함께 많은 좌파가 노동당으로 향했다.

변화

2017년 6월 총선까지 코빈은 승승장구했다. 코빈은 브렉시트를 찬성하든 반대하든 모두 노동계급과 영국 국민 다수의 이익을 추구하자고 호소했다. 의회에서 압도적 다수파를 이루려던 보수당의 구상은 무참히 망가졌고, 노동당 지지율의 상승폭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제 선거를 한 번만 더 치르면 코빈 총리의 시대가 열릴 것만 같았다.

이 선거 직전에 맨체스터에서 폭탄 공격이 벌어졌고, 기성 정치인들은 이를 이슬람 혐오와 인종차별을 부추기는 데 이용하려 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오히려 코빈은 역대 영국 정부들이 직접 다른 나라를 침공하거나 제국주의적 전쟁에 동참한 것이 그런 비극을 일으킨 원인이라고 지목하며 영국의 제국주의적 외교 정책을 비판했다. 그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영국의 외교 정책이 폭탄 공격에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소수가 아니라 다수를 위해”라는

슬로건으로 압축되는 코빈의 총선 공약은 인기가 좋았다. 기성 권력자와 자본가 계급에 염증을 느끼던 영국 유권자 1200만 명이 신자유주의와의 완전한 단절을 선언한 코빈의 좌파적 주장에 호응했다.

그러나 단 2년 반 뒤에 열린 2019년 12월 총선에서 코빈이 이끈 노동당은 참패했다. 선거 공약은 2017년 총선과 비슷했기 때문에 정책 차이는 중요한 변수가 아니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영국 사회의 계급투쟁 수준이 낮다는 것이었다.

영국의 기성 정치 권력자들과 자본가 계급은 보리스 존슨이 완수하겠다는 브렉시트가 가져올 혼란도 걱정이었지만, 코빈의 노동당이 집권하며 신자유주의에 더 큰 균열이 생기는 것을 더 싫어했다. 그래서 토폴 뭉쳐 코빈을 저지하려 했다. 코빈을 물어뜯는 온갖 비방이 난무했다.

이를 뒤집을 만한 수준의 계급투쟁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부족했다. 사람들은 파업·시위·집회에 나서면서 집단적 단결의 중요성을 느끼고 이해하게 된다. 집단적 사상에도 더 귀를 기울이게 된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그런 투쟁이 아직 벌어지지 않았다. 기후 위기에 항의하는 ‘멸종반란’ 운동 등이 가능성을 보여 줬지만, 아직 세력 균형을 뒤집을 만큼은 아니었다.

코빈의 성장과 2017년 총선의 성공으로 개혁에 기대감이 상승하고 많은 노동계급 사람들의 자신감이 높아진 상황을 활용해 계급투쟁을 전진시킬 가능성은 있었다. 그러나 영국 노동계 지도자와 많은 좌파 활동가들은 코빈의 선거적 성공에 모든 것을 걸었다. 그들은 대규모 시위를 벌이거나 파업을 독려하지 않았다. 단백질을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스스로 힘써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은 자라지 않는 법이다.

노동당 안에서는 우파적 반발이 거셌다. 의원단을 중심으로 한 노동당 우파는 코빈에 대한 거짓 비방에 동조하며 계속해서 코빈을 끌어내리려 했다. 그들의 행태는 그야말로 몽니 부리기였고 노동계급에 대한 범죄였다.

딜레마

코빈과 노동당 좌파의 후퇴도 있었다. 코빈은 오랫동안 견지한 핵미사일 반대 입장에서 후퇴했다. 이는 반제국주의 정치와 운동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일이었다.

코빈은 브렉시트 입장에서조차 후퇴해, 2016년 국민투표 결과를 뒤집을 2차 국민투표 실시 입장으로 선회했다.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유권자들조차 2016년 국민투표 결과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는 상황에서 2019년 12월 총선은 브렉시트가 최대 쟁점이 됐는데, 이 입장 변경은 무원칙하고 비민주적인 데다가 코빈이 동요한다는 인상을 줬다.

노동당과 코빈이 유대인을 혐오한다는 비방에 맞서 코빈과 노동당 좌파가 싸우지 않고 후퇴한 것도 큰 실책이었다. 이 비방은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정당성 훼손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이다. 코빈이 당대표를 하는 동안에도 좌파 인사가 유대인 혐오적이라는 혐의로 제명됐다. 또, 바로 얼마 전에는 코빈 자신을 노동당에서 제명하려는 우파의 공격이 있었는데, 코빈은 여기서도 물러서며 복당을 선택했다.

코빈과 노동당 좌파가 이렇게 후퇴할수록 기성 권력자들과 노동당 우파는 코빈 깎아내리기에 더 자신감을 가졌고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수십 년 동안 올곧게 좌파적 신념을 고수하고 노동당의 잘못된 당론에 용기 있게 맞선 코빈의 이력을 볼 때 이런 후퇴는 그의 성품 탓은 아닐 것이다.

좌파적이더라도, 노동당의 단결 유지와 선거 승리를 가장 중시하는 정치가 그런 불가피하지 않은, 그러므로 무원칙한 타협과 후퇴의 주요 요인이었다. 즉, 의회가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다른 모든 것을 지배해야 한다고 보는 노동당의 정치가 근본적 문제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의 중앙위원장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노동당 좌파의 처지를 이렇게 설명했다. “노동당 좌파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노동당이 코빈을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 그리고 이에 반발하면 누구든 징계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을 — 보면 노동당 내 사회주의자들은 블레어 하에서 누렸던 만큼의 선전·선동의 여지도 얻지 못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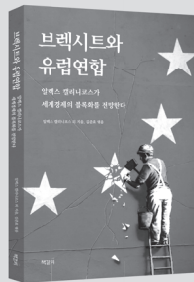
“당의 단결(사실은 생존)이라는 미명 하에 침묵할 것인가? 그러면 코빈 지도부 하의 노동당에 입당한 수십만 당원들을 배신하는 일일 것이다. 아니면 반향을 백할 것인가? 그러면 축출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과거 노동당 좌파들은 이런 딜레마를 피할 수 있었다.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거대한 대중 운동이 보호막이 돼 줬기 때문이다. 지금 노동당 좌파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 노동당 좌파는 노동당에서 우격다짐으로 재확립되고 있는 파산한 극단적 중도 정치와 결별하고 새로운 사회주의 정당을 결성해야 할 것이다.”

코빈의 부상이 가져온 기회가 유실된 데에서 결정적으로 비어 있는 고리는 노동계급 투쟁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현실로 바꿀, 의회보다 거리와 일터에서 벌어지는 투쟁을 더 중시하는 정치와 조직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이 거리와 일터라는 무대에서, 선거보다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중시하는 정치로, 모든 기회를 잡아 계급투쟁의 성장을 위해 애써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 임무를 잘 수행하려면 사회주의자는 계급 속에 뿌리 내려야 한다. 지금은 그것이 잔뿌리 일지라도 활력이 있는 뿌리라면, 사회주의자는 계급투쟁의 전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 사회주의자들이 파시스트의 성장을 저지하는 데 한 몫했듯이 말이다.

추천 책



브렉시트와 유럽연합
—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세계경제의 블록화를 전망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외 지음, 김준호 엮음,
책갈피, 176쪽, 9,000원

엔겔스 탄생 200주년

엔겔스가 파헤친 여성 차별의 기원

김종환

엔겔스는 마르크스의 동반자였을 뿐 아니라 그 자신이 위대한 사상가였다. 특히 엔겔스는 마르크스와 함께 유물론적 역사관을 발전시켜 사회주의를 과학적 기초 위에 세우는 데 기여했다. 이런 역사유물론의 방법을 적용해 엔겔스는 여성 차별의 기원도 밝혔다.

엔겔스는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1884, 하단 사진)에서 계급이 등장하면서 여성 차별이 시작됐다고 썼는데 이것은 대단히 파격적인 주장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기원 같은 것은 신경 쓰지 않고 여성은 언제나 차별받아 왔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성폭력의 역사》 내지는 《우리의 의지에 반하여》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의 저자인 수전 브라운밀러는 이렇게 주장한다.

“남성이 자신의 성기를 두려움을 일으키는 무기로 쓸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일은 불의 사용과 돌도끼의 발명과 함께 선사시대에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발견으로 꼽아야만 한다. 강간은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결정적인 기능을 수행해왔다.”

여성 차별의 기원 문제는 단지 먼 과거의 역사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날 여성해방의 전망과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여성 차별이 계급과 함께 생겨났다는 주장을 뒤집으면 계급 없이 운영되는 사회를 건설하면 여성 차별도 없앨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여성 차별은 원래 존재하는 것이거나 생물학적으로 남자의 DNA에 프로그래밍 된 것이라면 차별적 욕망을 인위적으로 억누르는 것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일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은 여성 차별이 사라진 평등한 사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은 백년도 더 전에 나왔기에 세부적인 내용에서 상당한 오류가 있다. 그가 많이 인용한 모건의 《고대 사회》라는 연구는 인류학이 이제 막 시작되는 시기에 이뤄졌기에 그 뒤 인류학과 고고학의 발전에 따라 오류가 많이 지적됐다.

그럼에도 모건의 중요한 통찰에서 이끌어낸 엔겔스의 핵심 주장은 옳았다. 계급이 없는 사회에서 여성은 평등했고 여성 차별이 계급과 함께 생겨났다는 엔겔스 책의 핵심 주장은 건재할 뿐 아니라 후대의 인류학과 고고학의 연구 성과들로 오히려 입지가 더 굳건해졌다.



최초의 인간 사회: 무계급 사회(원시 공산주의)

엔겔스는 인간 사회에 대한 유물론적이고 역사적인 연구를 통해 최초의 인간 사회에는 계급과 여성 차별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무계급 사회가 계급 사회로 바뀌면서 비로소 국가와 여성을 차별하는 형태의 가족도 등장했다고 주장했다.

학자들은 생물학적으로 현재의 인간이 등장한 시기를 대략 10만 년에서 20만 년 전 사이라고 예상한다. 짧게 잡아도 무려 10만 년 전의 일에 대해 엔겔스가 이런 주장을 펼친 근거는 당시 유럽인들이 북아메리카에서 발견한 이로쿼이 족의 사회에는 계급과 여성 차별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로쿼이족 말고도 지구상에는 초기 인간 사회처럼 수렵채집을 하거나 원시적 농법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들이 남아 있다. 엔겔스만이 아니라 많은 인류학자들은 이들을 연구하면 문명 등장 이전 사회를 유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런 사회는 10만 년 전 사회와 똑같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논쟁도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런 사회들은 나머지 세계와 완전히 고립돼 있지 않고 이들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각종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많은 뛰어난 인류학자들이 엔겔스와 비슷한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2015년 권위 있는 과학잡지 《사이언스》에 실린 연구는 콩고와 필리핀에 남아 있는 수렵채집 사회를 연구한 뒤 이렇게 주장했다.

“수렵채집 사회가 더 마초적이고 남성 중심적이었다는 시각이 여전히 널리 퍼져 있다. 우리는 이후 농경이 시작돼 자원 축적이 가능해지고 나서야 불평등이 출현했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미국의 인류학자 엘리너 리콕은 이렇게 썼다.

“(이런 사회에는) 토지의 사적 소유



현존 수렵채집 사회를 연구한 학자들은 최초 인류에는 차별과 착취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아프리카 산족

를 통해 구성원마다 가용자원이 달라지는 일도 없고, 성별 분업 이상의 노동의 전문화도 없다 ... 평등주의적이었던 이들 사회의 기본 원칙은 구성원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각자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이런 평등주의적 사회는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나뉘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만큼 여성 차별도 없었다. 엔겔스는 이 사회들을 ‘원시 공산주의’라고 불렀다.

이런 사회가 평등주의를 유지하는 비결은 사회의 생산력이 낮아서 잉여 생산물이 없고 구성원들은 생존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만 했다는 데 있다. 잉여 생산물이 없기 때문에 착취나 계급이 있을 수 없었다.

수렵채집 사회를 연구한 인류학자들의 연구와 고고학 연구를 모아 보면 최초의 인류는 대체로 수십 명 정도가 무

리를 이뤄서 한 지역에서 살다가 먹을 것이 떨어지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며 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남성과 여성 모두 사냥에 나섰지만 여성은 임신, 출산을 하거나 젖을 먹이는 동안에는 사냥에 나설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여성이 채집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채집을 주되게 책임졌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런 무리 생활에서는 채집이 가장 안정적인 식량 공급원인 경우가 많다. 사냥은 실패하기 십상이지만 채집은 어느 정도 꾸준히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성이 식량 공급의 주된 책임자이고 남성들은 이런 여성들에 기대지 않을 수 없다. 동시에 사냥으로 얻는 식량은 과일, 채소류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고급 단백질을 보충할 방법이라는 점에서 또 귀했다.

결국 여성과 남성은 생존하려면 서

로 협력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존 조건에서 체계적인 여성 차별이 있었으리라 생각하기 어렵다.

‘선사 시대부터 남성이 여성을 지배했다’는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은 선사 시대 인류의 생존 조건을 고려하면 전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수렵채집 사회에서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 무리가 생존의 단위였고 그런 만큼 부부와 자녀로 이뤄진 핵가족도 존재하지 않았다. 여성이 자녀를 출산하면 아들이든 딸이든 그리고 아빠가 누구인지 따지지 않고 무리 전체 차원에서 공동으로 키웠다.

17세기에 캐나다의 수렵채집 공동체를 처음 만난 프랑스 선교사의 기록을 보면 이런 일화가 나온다. 선교사가 원주민 남성에게 누가 자기 자식인지 모르는 것은 “죄악”이라고 꾸짖자, 그는 이렇게 대꾸했다. “당신 말은 틀렸다. 당신네 프랑스인들은 자기 자식만을 사랑하지만 우리는 부족의 모든 아이들을 사랑한다.”

문명이 등장하기 이전에 ‘원시 공산주의’가 존재했고 여성 차별이 없었던 것은 엔겔스의 주장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시기가 현생인류의 역사의 약 95퍼센트를 차지하는 만큼 생물학이나 진화론을 근거로 여성 차별을 인류의 보편적 특징으로 취급하는 주장의 기반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엔겔스가 이런 사회를 낭만적으로 예찬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썼다.

“이 조직은 멸종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그것은 ... 지극히 미개화된 형태의 생산 즉, 극도로 적은 인구가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다는 점과 그 결과로 인간이 자신에게 낯설고, 적대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외부 자연에 거의 완전히 지배당한다는 사실에 기초했다.”

농사의 시작과 “신석기 혁명”

약 1만 년 전부터 인류는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새로운 사회가 등장한다. 원시농경 혹은 원예농업 사회로 불리는 사회다.

그러나 “원예”라는 말에서 보듯, 농사에 사용되는 도구는 아직 주로 뒤지개와 좀더 세련된 돌도구를 이용하는 수준이었다. 이 때를 신석기 시대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런 초보적 농업만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생겼다. 무엇보다 주기적으로 근거지를 옮길 필요가 사라졌고 그러면서 여성의 출산과 양육 방식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무리 전체의 생존이 주기적으로 근거지를 옮기는 것에 달려있을 때에는 젃먹이가 많으면 그만큼 불리했다. 그래서 정착하기 이전의 사회에서는 낙

매, 영아 살해, 섹스 거부 등으로 자녀 수를 제한했다. 농사를 짓고 한 곳에 정착해서 살게 되자 더는 자녀 수를 제한할 필요가 없어졌고 오히려 자녀가 많을수록 농사를 더 많이 지을 수 있었다.

이처럼 농사를 시작한 것은 사회 전체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영국 인류학의 거장 고든 차일드는 이를 “신석기 혁명”이라고 불렀다.

초기 농경 사회에서도 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차별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몇 가지 중요한 다른 변화들이 나타난다.

무엇보다 생산력이 커진 덕분에 잉여 생산물이 생겼다. 신석기 시대의 핵심 유물인 토기는 잉여를 보관하는 수단이었다. 끊임없이 이동해야 한다면

굴이 크고 무거운 도자기를 만들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농경 사회로 접어들면서 생긴 또 다른 변화는 종족이 전보다 더 중요해졌다는 점이다. 분쟁이 생기면 당사자들이 무리를 떠나면 그만이던 수렵채집 사회와 달리, 정착 생활에서는 내부 갈등을 해소할 방안이 필요했다. 더욱이 공동체의 규모도 전보다 커져서 이젠 수백 명에 달했다. 또한 이제는 잉여 생산물이 있었기 때문에 재분배가 더 중요해졌다. 특히 자녀가 많지만 당장의 노동력은 적은 가구를 다른 가구들이 지원하는 것이 중요했다. 종족은 경제적 재분배를 통해 사람들을 결속하는 데서 중요한 구실을 했다.

이에 따라 지위 고하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인류학자들이 ‘빅 맨’(Big Men)이라 부른 이들이 등장한 것이다. 평등주의적이던 사회에서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난데없이 부상한 것이 아니라 생산력 발전으로 인해 지위 고하가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빅 맨’의 등장이 곧 사회의 계급 분화를 뜻한 것은 아니다. 이들은 폭력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베풀어서 명망을 얻었다. 현존하는 초기 농경 사회에 대한 인류학자들의 기록을 보면, 이들 ‘빅 맨’은 높은 명망에 걸맞는 책임을 유지하려고 남들보다 오히려 일을 더 많이 했다. 그들이 타인의 잉여를 수중에 모을 때도 그것은 다시 종족 전체에 나눠주기 위한 것이었다. 착취가 아닌 것이다.

터키 차탈회위크, 차외늬 유물

잉여생산물과 지위의 높낮음이 생겼지만 그것이 자동적으로 계급과 착취를 낳지는 않았다. 오히려 농경을 시작한 이래 수천 년 동안 무계급 사회, 여성 차별이 없는 사회가 유지됐다.

약 1만 년 전에 존재했을 고대 도시가 터키에서 발견됐는데 차탈회위크라 불린다. 약 5000명이 모여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농경이 상당히 발전했을 것이다. 학자들은 발견된 집터의 크기가 대동소이하고, 시신과 함께 매장된 유물의 빈부 차이가 없고, 큰 집

터도 있지만 거기서도 다른 집들과 비슷한 노동 도구들이 발견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평등주의적 사회였을 것이라고 본다. 또한 이 사회에서는 새로 태어난 아이들을 키우는 일이 종족 전체의 책임이었음을 강하게 암시하는 증거가 있다. 각 집안에서 발견되는 해골 유물의 DNA를 분석해 보니 아동과 성인이 혈연 관계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래서 학자들은 “남녀 모두 공동노동, 공동육아를 했을 것”이라고 본다.

한편, 베른하르트 브로지우스가

2005년에 발표한 한 논문은 차탈회위크 인근의 차외늬라는 도시를 다루는데 그 내용이 인상적이다. 차외늬는 차탈회위크와 비슷한 시기에 존재한 도시였지만 빈부격차가 있었다. 그런데 약 9200년 전 어느 날 큰 집과 제단이 불타고 차탈회위크와 비슷한 도시로 거듭났다. 즉 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이는 생산력의 발전이 자동적으로 계급 발생으로 이어지지 않는음을 보여 주고, 많은 사람들이 평등주의적인 사회를 유지하려 했음을 말해 준다.

계급의 등장

하지만 일부 농경 사회에서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끝내 지배계급으로 변신했다. 생산력의 한계 때문에 봉착한 위기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평등주의가 깨진 것이다.

이 배경에는 농경 사회의 모순이 있다. 일단 정착을 시작하면 인구가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당시 생산력이 낮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인구에는 한계가 있었다. 기후 등이 변하면 생산력을 혁신적으로 높이지 않는 이상 기존 방식으로는 사회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학자들은 이것이 인류 초기 문명의 발상지였던 메소포타미아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지역에는 배수와 관개수로를 건설하면 아주 많은 식량을 재배할 수 있는 비옥한 땅이 있었다. 그런데 그러려면 노동력을 대규모로 조직해야 했을 것이다.

지위가 높았던 ‘빅 맨’들이 나서서 이처럼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데 성공을 거두면서, 이들은 잉여 생산물을 자신이 통제하는 것이 사회 전체에도 이롭고 자신을 사회 진보의 화신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그리고 사회에 닥친 위기가 클수록 이들은 평등주의를 깨뜨려서라도 자신의 지위를 지키는 것이 사회 전체에 유리하다고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소개한 터키 차외늬의

사례는 이에 대한 저항도 있었을 것임을 말해 준다. 따라서 잉여 생산물에 대한 통제력을 쥔 집단이 그 통제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억압 기구(즉, 국가)와 이를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냈을 것이다. 일단 그런 구조와 이데올로기가 구축되자 그 집단은 더는 생산력 발전에 기여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잉여를 통제하게 됐다.

엔겔스는 지배계급이 어느 순간부터는 공공의 잉여를 자신의 ‘사유 재산’으로 취했고 이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억압할 목적으로 ‘국가’를 세웠다고 봤는데, 여러 연구 성과를 종합해 볼 때 타당한 논리다.

여성 차별의 기원

또한 엔겔스는 계급이 등장하면서 여성 차별도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이를 “여성의 세계사적 패배”라고 불렀다. 엔겔스의 책 제목이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인 이유이다. 계급이 없었던 사회가 오랫동안 유지됐고 계급과 함께 여성 차별이 등장했다는 엔겔스의 주장은 완전히 옳았다.

그러나 엔겔스는 왜 여성이 아닌 남성이 권력을 잡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후대 인류학자들과 크리스 하먼 같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보충했다.

계급은 단번에 등장하지 않았다. 초기 농경 사회에서 최초의 계급 사회까지는 적어도 수천 년이 소요됐는데 그 기간 동안 농업 기술에서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 특히 급속과 동물을 다룰 수 있게 된 것이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는데 바로 쟁기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쟁기는 이전까지 쓰던 괭이 같은 농기구보다 훨씬 더 무겁고 위험한데 임신 중인 여성에게는 더 말할 나위가 없었다. 그런데 농경 사회에서는 자녀가 많을수록 종족 전체에 더 이로웠으므로 고고학 유물을 보면 쟁기질은 거의 대부분 남성이 맡았다.

그 결과 남성이 이제 식량 생산의 핵

심 책임자가 됐다. 수천 년을 거치면서 이는 종족 안에서 남성의 영향력이 커지는 효과를 냈다. 사회의 다른 변화, 즉 전쟁이 잦아지고 장거리 무역이 발전한 것도 임신과 출산을 하는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했고 이 분야에서도 남성들이 우세해졌다.

그래서 부계제, 즉 아버지를 따라서 조상을 따지는 제도가 점차 일반화됐다.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한다는 생물학적 특성이 특정한 생산력 발전 국면과 맞물리면서 남성이 생산의 주역으로 부상했고, 이는 다시 재생산 제도의 변화로 이어진 것이다.

약 7000년 전 최초의 지배계급이 등장할 무렵 사회는 부계제 사회였다. 지배계급의 등장과 함께 바뀐 것 중 하나가 결혼제도다.

이전까지 결혼은 두 종족이 서로 호혜 관계를 맺는 방식이었고, 종족 차원에서 결혼 관련 대소사를 결정했다. 여성, 특히 나이드 여성도 종족에서 나이드는 남성과 똑같은 발언권을 누렸으므로 특별히 여성차별적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제 지배계급은 자기 혈통의 남성에게 더 많은 자원을 집중시키는 수단으로 결혼을 이용했고 여성은 그에 따라 거래되는 지위로 격하됐다.

지배계급은 피지배계급 가구의 남성에게 세금(잉여)을 바칠 책임을 지웠다. 피지배계급 남성은 이런 요구를 가구 전체에 전달하기 위해 가구 안에서 명령하고 소비를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초기 계급사회에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가족에서 모두 가부장제가 자리잡았다.

한 가지 유념할 것은 대부분의 남성은 지배계급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무거운 쟁기질을 하는 남성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쟁기질을 하지 않는 남성이 지배계급이 됐다. 계급의 등장으로 모든 남성이 권력을 갖게 되기는커녕 남성의 다수는 전보다 지위가 낮아졌다.

📖 새로 나온 소책자



배따이들을 위한 엔겔스 가이드

커밀라 로일 지음, 이수현 옮김
노동자연대, 104쪽, 4,000원



자본주의에서 더 커진 모순

엔겔스는 한 가지 주장을 더 펼쳤다. 생산 수단이 더 발전함에 따라 가족의 형태와 여성 차별의 양상도 계속 변한다고 봤다. 계급 사회 안에서도 가족의 본질과 여성 차별의 양상이 다양했다는 통찰이다.

이 전반적인 과정은 오늘날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이 흔히 시도하듯 “가부장제”라는 단일한 항목으로 포괄될 수 없다. 착취 계급과 피착취 계급의 가족은 언제나 서로 어마어마하게 달랐다. 로마 시대 노예 소유주 가족과 노예 가족을 똑같이 볼 수 없고, 마찬가지로 중세 봉건 영주의 가족과 농노 가족을 똑같이 볼 수 없다. 또한 한 사회의 지배계급 가족은 다른 사회 지배계급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지배계급 여성이 종속적이지만 공적 생활에 참여했던 사회가 있었고 지배계급 여성이 그런 활동에 전혀 참여할 수 없었던 사회가 있었다.

이를 지적하는 것은 여성이 차별받았다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성 차별이 인간 본성의 발현이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 발전의 산물이고, 향후 역사 발전을 통해 철폐할 수 있음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엔겔스는 자본주의 등장으로 생겨난 여성해방의 잠재력에도 주목했다.

“대공장 산업은 여성을 집에서, 노동시장과 공장으로 옮겨 놓았고 종종 여성이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도록 만든다. 그 결과, 프롤레타리아 가정에 남아있는 남성 지배의 마지막 흔적들은 그 기초를 모두 잃었다[.]”

그러나 엔겔스는 이처럼 자본주의에서 여성이 해방될 잠재력을 얻었지만 동시에 자본주의 때문에 그런 잠재력이 실현되지 못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녀[프롤레타리아 여성]가 사적 영역[가정]에서 맡겨진 임무를 완수하는 한 그녀는 공적 생산 영역에서 배제되고 소득을 벌 수 없다. 그녀가 공적인 산업에 참가해서 독자적인 소득을 벌고자 하면 그녀는 맡겨진 임무를 완수할 수 없게 된다.”

비록 엔겔스가 노동계급 가족이 사라질 것이라 예측한 것은 오류였지만 엔겔스가 지적한 이런 모순은 오늘날 훨씬 더 커졌다. 예컨대 오늘날 홈스쿨링을 고수하는 소수 가정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집이 아닌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가사를 처리해 주는 기계나 서비스 산업도 훨씬 더 발달했다. 그런데도 여성들의 일상은 해방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모순은 이윤 체제인 자본주의가 유지되는 한 사라지지 않는다. 자본주의 발전으로 국가가 재생산 일부를 사회화해도 각 가정이 재생산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또한 국가나 자본이 재생산 기능을 일부 부담할 때조차 그 목적은 여성해방이 아니라 여성 노동력을 더 효율적으로 착취하기 위해서다. 또한 지배계급은 노동계급을 분열시키려고도 여성 차별을 조장한다.

엔겔스는 노동계급이 혁명적 투쟁을 통해 자본주의 체제를 제거한다면 여성해방을 실현할 수 있다고 봤다. 엔겔스의 책은 여성 차별의 기원을 유물론적으로 설명하면서 여성해방이 몽상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이상임을 보여 줬다.

이 글은 필자가 크리스 하먼의 논문 ‘엔겔스와 인류 사회의 기원을 기초로 11월 16일 노동자연대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대선 이후 바이든 앞에 놓인 암초들

김준호

미국 대선 후 바이든의 새 정부가 어찌 구성될지에 관심이 쏠려 있다. 아직 많은 것이 미확정 상태지만, 지금까지 나온 무성한 하마평과 논란을 보면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오바마 정부 시절의 친기업·친제국주의 인사들이 요직에 복귀하리라는 전망이 두드러진다. 예컨대 시카고 전(前) 시장 람 이매뉴얼이 여러 장관직의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매뉴얼은 오바마 백악관의 첫 비서실장이었고 이후 시카고 시장으로서 교사 파업과 인종차별 반대 시위 진압에 앞장섰던 자다.

람의 형 이지키얼은 바이든의 코로나19 대응 TF팀에 속해 있는데, “노인들의 삶이 의미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라 있다.

이 TF팀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에 대응해 “4~6주 정도 경제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압력에 밀려 “정식 제안은 아니었다”고 발뺌했다. 30년 가까이 바이든의 참모였고 이제 백악관의 초대 비서실장으로 거론되는 론 클라인은 “전국적 경제활동 중단은 절대 없다”고 못 박았다.

바이든의 코로나19 대응 우선순위가 대중의 생명과 안전이 아니라 기업의 경제활동(이윤)에 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이런 우선순위는 트럼프가 극렬 밀어붙였던 것이기도 하다.

기후 재앙 대응 문제는 어떨까? 바이든은 “기후 변화 운동가들과 기업들을 잘 연계하리라 기대”한다며 백악관 공보수석에 세드릭 리치몬드를 선임했다. 하지만 리치몬드는 하원의원 시절 석유·천연가스 기업들의 후원을 받았고, 공화당 의원들과 협력해 화석연료 증산과 천연가스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들을 발의했다. 리치몬드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의 ‘그린 뉴딜’ 정책에 앞장서 반대하기도 했다. 바이든이 바라는 “연계”가 어떤 내용일지 짐작되는 대목이다.

일각에는 바이든이 기후 재앙에는 잘 대응하리라는 기대가 있고, 바이든도 탄소세 제정이나 파리기후협약 복귀 등을 공약하며 그런 기대를 자극했다. (기후변화 부정론자로 악명 높은 트럼프에서 반사이익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그 공약에는 다른 공공이가 있다. 바이든은 탄소세 제정으로 “다른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미국을 발목 잡을 수 없게 하겠다”고 밝혔고, 환경 규제 강화

로 중국이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으며 추진하는 일대일로 사업에 타격을 입히겠다고 공언했다. 기후 재앙 대응이 아니라 중국 압박에 초점이 있는 것이다.

외교·안보 라인도 일각에서는 “여풍(女風)” 운운하며 열광하지만, 제국주의적 갈등에 대한 바이든의 방향성을 보여 주고 있다.

국방장관으로 거론되는 미셸 플러노이는 오바마의 국방부 차관이었는데, 냉전 전쟁광 로널드 레이건의 모토이자 트럼프도 인용했던 구호인 “힘을 통한 평화”를 신봉하는 자고, “그림자 정보 기관”이라는 별칭이 붙은 전략 부문 기업 ‘부즈 앨런 해밀턴’의 이사다.

플러노이는 유사시 미군이 “남중국해를 오가는 중국의 해군 함정, 잠수함, 상선 모두를 72시간 안에 격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공공연히 역설했다. 바이든은 자신이 트럼프보다 중국을 더 잘 압박할 것이라 대선 전부터 밝혀 왔는데 그에 걸맞는 인사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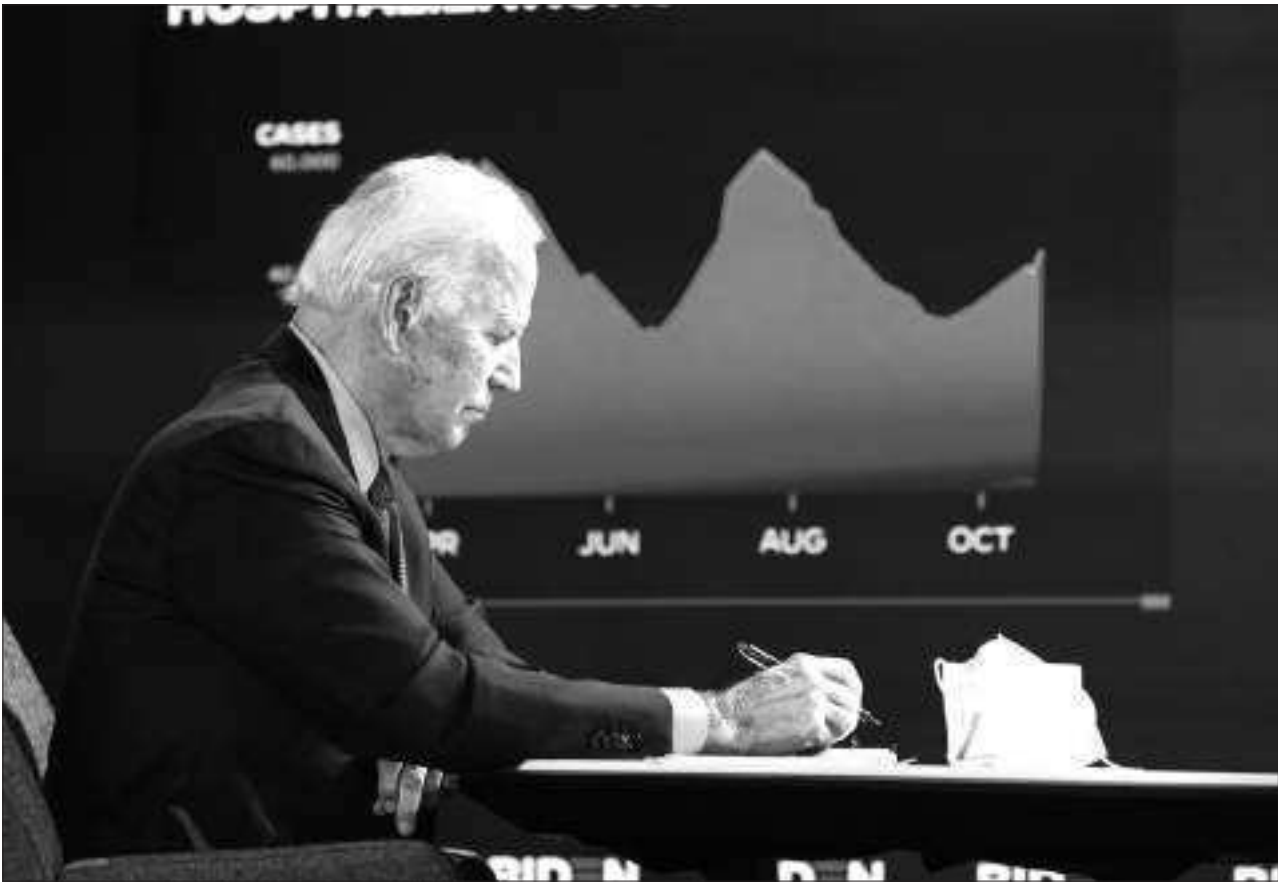
국무장관으로 거론되는 수전 라이스도 만만찮다. 라이스는 오바마 정부 시절에 미국이 리비아·시리아·아프가니스탄 등지를 파바다로 만드는 데 일조했고, 대(對)이란 제재 강화와 이스라엘과의 공조 강화를 적극 옹호했던 자다.

이 역시 바이든의 ‘코드’에 맞는 인사다. 바이든은 “중동 평화를 위해” 팔레스타인을 인정하겠다고면서도 이스라엘과의 굳은 공조를 재확인했는데, 그런 맥락에서 바이든은 트럼프가 이스라엘로 이전한 미국 대사관을 다시 옮기지 않겠다고 했다. 반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핍박을 규제하겠다는 말은 일언반구 없었다.

바이든은 트럼프 정부 시절에 “훼손”됐고 “부족”했다 여겨지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지도력을 “회복”하려 한다. 중국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면서도 동맹들을 더 규합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4년을 거치며 세계 주요 지역 모두에서 첨예해진 갈등은 바이든 집권 후에도 계속 심화될 수 있다.

이렇듯 바이든은 미국 안팎에서 지도력을 “회복”하고자 한다. 바이든의 계급적 기반인 대자본가·권력층도 트럼프 이전의 기존 지배 체제로 부드럽게 “회복”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 앞에는 만만찮은 암초들이 놓여 있다. 바로 트럼프와 극우 운동, 그리고 끔찍했던 트럼프 4년을 거친 후 진보적 변화를 갈망하는 대중이 그것이다.



바이든이 미국의 “지도력”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트럼프 가도 극우는 남아

미국 대선이 끝나도 트럼프의 몸니는 끝날 줄을 모른다.

트럼프는 “진정한 미국인들은 내 편”이라며 소송을 걸고, 정권 인수 절차 돌입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는 국방장관 마크 에스퍼 등 내각 인사들을 전격 경질했다.

이 와중에 가뜰이나 허술한 코로나19 대응은 뒷전으로 밀렸다. 바이든 승리 선언 바로 다음 날인 8일부터 일일 확진자 수가 치솟아, 한때 19만 명을 넘기기도 했다. 11월 17일 현재 미국의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는 1150만 명 이상으로, 서울시 인구 전체보다도 많다.

이런 몸니의 효과는 두 가지다. 첫째, 트럼프는 자기 지지 기반의 사기를 유지하고 이들에 대한 영향력을 보존했다. 둘째, 이 힘으로 트럼프는 공식 정치의 오른쪽에서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11월 14일 워싱턴 DC에서 잘 드러났다. 극우 무장 단체 ‘오스 키퍼스’, ‘프라우드 보이즈’ 등이 주도해 수만 명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라(MAGA)’ 전국 집중 시위를 벌인 것이다.

시위 참가자들은 “트럼프는 정치인들과 달리 자신이 한 말을 지키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을 바란다”고 했다. 트럼프가 극도로 반동적인 혐오와 차별,

갈등을 조장해 왔는데 말이다.

하지만 이 말은 이들의 근처에 깔린 정서를 훑듯 보여 준다. 바로 주류 기득권층이 자신들을 배신하고 사지로 내몰았다는 분노다. 이들에게 트럼프 낙선은 기득권 배신의 최신 사례다.

이들의 구성도 의미심장하다. 시위 참가자 다수가 백인 자영농·소상공인·실업자 등이었지만 “이민자 몰아내고 일자리 지키자”고 주장하는 유색인종들도 일부 있었다. 자신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피해자라고 여기는 층이 트럼프의 ‘아웃사이더’ 행세에 호응해 자신의 분노를 쏟아낸 것이다.

트럼프는 자동차 행렬로 이 시위대를 지났고, 시위대는 “4년 더”를 외치며 환호했다. 자신이 걸치시킨 반(反)기득권 성향 지지층이 견재함을 과시한 것이다.

이런 과시는 공식 정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전통적 자본가 계급 정당인 공화당은 엇박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공화당 지도부는 기존 지배 질서를 지키려면 선거 부정 운운하는 트럼프와 거리를 뒀야 한다고 여기지만, 결선투표를 앞둔 곳에서 승리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려면 트럼프가 결집시킨 투표층을 거스르기도 난처한 듯

하다. 그래서 이들은 트럼프의 “선거 부정” 운운과는 선을 그으면서도 “법원에서 판결하자”는 말에는 맞장구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출타기가 그들 뜻대로 풀릴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다른 한편에서, 공화당 지도부와 기반이 다른 당내 정치인들은 트럼프 지지층에 올라타려 적극 움직이고 있다.

공화당 내 최대 강경 우익 집단 ‘티파티’는 트럼프의 몸니를 줄곧 지지해 왔는데, 그 지도적 인물인 하원의원 폴 고사와 마이크 켈리는 14일 MAGA 집회에 참가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원의원 당선자 마저리 테일러 그린은 ‘큐어년(QAnon)’ 음모론 지지자이자 “하이힐 신은 트럼프”라는 별칭으로 유명한데, 그도 집회에 참가해 연단에서 연설하기까지 했다.

이들은 “선거 부정”, 개표 오류 등으로 계속 쟁점을 만들고 있다. 트럼프 지지자들의 분노를 자극해 정치적 영향력을 늘리려는 것이다.

이렇게 전통적 자본가 정당인 공화당 안팎에서 극우 포퓰리즘 정치가 지배 우파 일부와 연결되며 서로 상승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동학은 트럼프가 백악관을 떠나도 계속돼, 장차 지금보다 더 강력한 극우·파시스트 운동을 성장시킬 토양을 제공할 수 있다.



트럼프 가도 극우는 남아 11월 14일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행진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라(MAGA)’ 같은 극우 무장 단체들이 이날 시위를 주도했다

기다리지 말고 대중 투쟁

하지만 반대편에 있는 진보적 변화를 염원하는 대중도 만만찮다. 이 또한 바이든을 압박하는 요소다. “바이든을 당선시킨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이 표 값을 받으려 나설 것”이라는 지적이 파다하다.

바이든은 인종차별 반대 시위와 거리를 두고 지배계급 주류를 대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독표할 수 있었다.

이는 거대한 반(反)트럼프 정서와 운동 때문이었다. (관련 기사 본지 343호 ‘대선 이후, 미국은 어디로?’)

이런 변화 염원은 유색인종 부통령 해리스에 대한 기대로 표현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번진수가 잘못됐다. 해리스는 정치 이력 내내 범죄자 엄단을 옹호해 왔고(관련 기사 본지 343호 ‘카말라 해리스가 차별받는 사람들을

대변할까?’),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 발발부터 지금까지 운동의 요구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민주적 사회주의’ 운동에 지도적 구실을 해 온 버니 샌더스는 노동부장관으로 입각하려 애쓰고 있다. 현재로서 바이든 측에서는 샌더스를 받아들일 기색이 전혀 없는데도 말이다.

▶ 9면으로 이어짐

러시아·터키 사회주의자 공동 성명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갈등 러시아·터키 모두 손 떼라



사진 출처: Ted Eytan(틀라카)

진정한 변화의 힘은 대중 자신의 투쟁에 있다. 11월 6일 워싱턴 DC 백악관 밖에서 트럼프의 낙선을 축하하는 시위대

“미국식 민주주의의 위기”?

이번 미국 대선이 시작도 하기 전부터,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난맥상을 거듭하자, “미국식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다”는 진단이 곳곳에서 나온다.

사실, 수백만 표나 적게 득표하고도 대통령에 당선할 수 있는 비민주적 선거제도를 가진 국가가 민주주의의 종주국을 자처했던 것 자체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선거 보름 후에 미개표 투표용지가 수천 표씩 무더기로 쏟아져지면서 말이다.

하지만 미국의 이런 비민주적이고 허술해 보이는 선거 제도는, 미국 지배자들이 권력을 쥔 채 벌인 부르주아 혁명(독립전쟁) 때부터 대중의 정치 참여를 체계적으로 제한하려는 의도에서 주의 깊게 구축된 것이다.(판권 글 《마르크스21》 14호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그러나 바로 **지금**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제제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선거 부정”을 둘러싼 논란이 종종 터진 것도

이와 연관이 있다.

지금 미국과 세계는 경제·전염병·기후 등 온갖 위기들이 중첩돼 있다. 지배자들은 짧게 봐도 10년 넘게, 길게 보면 40여 년 동안 위기의 대가를 대중에 떠넘기면서 부와 권력을 누려 왔다.

2011년 분출한 ‘월가를 점거하라’ 운동은 이에 대한 분노를 집약해 크게 주목받았다. “1퍼센트만 구제하는 것이 민주주의냐!”

사람들은 이 체제의 위기가 낳은 여러 병폐에 신음하면서, 사회가 이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이런 의문들은 대개는 모호하거나, 체제 자체의 원리보다는 이런저런 현상들에 집중하곤 했지만, 깊이 고인 불신과 쓰라림을 먹고 자라났다. ‘나를 위협에서 지켜주지 않고 내 의사에 귀 기울이지도 않는다면 민주주의가 무슨 소용인가?’

쓰라림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분출했다. 한편에서는 자본주의 체제의 병폐에 맞선 주목할 만한 대중 저항으로 드러났다. 2019년의 세계적 반란 물결에서

2020년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까지 이어지는 흐름은 그 두드러진 사례다.

반대편에서는 불만을 가장 반동적으로 결집한 극우가 부상했다. 지난 10여 년 동안 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 모두에서 신자유주의 정부에 대한 환멸에 힘입어 극우가 성장했다.

트럼프가 미국과 세계에서 한 구실도 이런 것이다. 트럼프는 ‘아웃사이드’를 자처하며 불신을 오른쪽에서 대변해 성장했고, 이를 이용해 (대개는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였지만) 미국 사회의 가장 반동적인 인사들을 자기 주위로 결집시켰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뿐 아니라 민주주의 일반을 부정하는 파시스트들이 자랄 토양을 닦고 있다.

즉 체제 자체의 위기와 체제에 대한 좌우 양쪽의 불신, 즉 정치양극화가 소위 “미국식 민주주의의 위기”의 핵심이다. 그에 견주면 미국 선거 제도의 후진성은 중요하지만 보조적 요인이다.

▶ 8면에서 이어짐

민주당 주류는 집권 전부터 ‘사회주의 때문에 총선에서 졌다’고 아우성친다. 이들이 집권 후라고 좌선화할까? 실령 샌더스가 장관직을 얻는다 해도, 진보적 노동 정책을 펼칠 여지를 확보하기는커녕 현 정부를 향한 대중의 분노를 단속하라는 압력이나 받기 십상일 것이다.

샌더스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

오-코르테스 등이 이끄는 ‘민주적 사회주의’ 운동은 “우리는 적이 아니다”(오카시오-코르테스)며 민주당을 달래기보다는, 대중에게 이제 바이든 정부가 대변할 체제의 온갖 폐악에 맞서 스스로 투쟁하라고 고무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진정한 변화의 힘은 대중 자신의 투쟁에 있기 때문이다.

좋은 징후가 있다. 워싱턴 DC에

서 극우가 행진을 벌인 그 날, 캘리포니아주(州)에서는 오바마가 수립하고 트럼프가 강화한 이주민 강제수용 정책을 규탄하는 대중 집회가 벌어졌다.

이런 운동이 더 확산돼야 한다.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에 나선 수많은 사람들이 극우의 결집, 온갖 차별, 코로나19 위기의 피해를 노동계급에 전가하는 데에 맞서 지금부터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소련 붕괴 즈음에 독립한 두 국가로 카스피해와 터키 사이에 위치해 있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놓고 분쟁 중이다. 이 지역은 아제르바이잔 영토에 속하지만 아르메니아인이 다수이고 1990년대 이래로 아르메니아가 실로 지배해 왔다. 올해 9월 여기서 수년 만에 가장 큰 군사적 충돌이 벌어졌고, 아제르바이잔은 나고르노-카라바흐의 일부 주요 도시들을 탈환했는데 이 과정에서 터키의 도움을 크게 받았다(관련 기사 본지 337호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충돌: 국가 간 경쟁이 전쟁 위기로 이어지다’). 러시아가 개입해 11월 9일에 휴전이 성사됐다. 터키와 러시아는 카스피해의 천연가스를 유럽에 수출하는 문제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서로 경쟁하고 있다. 다음은 11월 14일, 터키와 러시아의 사회주의자들이 발표한 공동성명이다.

아르메니아는 라촌 회랑 지역에서 터키의 지원을 받는 아제르바이잔군에 패배하고 슈시(아르메니아명은 슈시시(市))를 잃고서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아제르바이잔군은 슈시에 근거지를 만드는 데 성공했는데, 슈시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는 나고르노-카라바흐공화국의 수도인 스테파나케르트시(市)가 있다. 아제르바이잔이 라촌 회랑을 지배하고 아르메니아의 패배는 시간문제라고 보였다.

이때 러시아가 카라바흐의 소요 사태, 슈시의 함락, 스테파나케르트의 함락 위험을 내세워 개입했고 터키와 아제르바이잔은 이에 맞설 수 없었다. 러시아는 전쟁 당사국들 사이에서 자신을 평화 “보증인”으로 내세워 왔지만, 이전의 여러 경우와 마찬가지로 러시아 “평화 유지군”은 점령군으로 봐야 한다. 러시아가 양국의 충돌 완화를 빌미로 아제르바이잔 일부 지역을 점령하게 된 것이고 이를 통해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모두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될 것이다.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으로서는 푸틴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필요가 없다. 터키는 지역 강국이 되길 지향하지만, 러시아 제국주의를 뛰어넘을 가능성은 없다. 하지만 터키는 아제르바이잔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끊임없이 키우려 할 것이며, 이 지역을 차지하려는 완만하고 느릿느릿한 제국주의적 본투가 시작될 것이다.

터키에게 카라바흐 지역을 통제하

는 것은 러시아에 맞대응하는 것뿐 아니라 카스피해로 가는 통로를 확보하고,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 가스를 유럽에 수출할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터키의 첫째 과제는 이미 해결됐지만[아제르바이잔-조지아-터키를 거치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했다], 러시아가 대놓고 반대하고 있어서 둘째 과제를 완수하는 데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 지역에서 러시아의 이익은 가스 수출 경쟁을 막는 데 있다. 러시아는 천연자원 시장에서 손실을 보면 경제적 재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이 속한] 엘리예프 일가는 권력을 지키고 자신들의 불안정한 사회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작은 전쟁 승리”가 필요했다. 그들은 국내 정치 문제에서 사회 내에 상당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악명 높은 사회 “안정성”을 위한 권위주의 통치 강화에 도박을 걸었기 때문이다.

현재 터키 영토와 아제르바이잔이 차지한 땅에는 수많은 아르메니아인들이 있다. 그들에 대한 어떠한 폭력도 용납할 수 없고, 어떠한 형태의 인종차별과 배외주의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20세기 초 아르메니아인들이 겪었던 비극(터키에 의한 학살)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만약 그런 일이 되풀이된다면, 새로운 전쟁과 보복 폭력이 일어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러시아와 터키의 국제사회주의자들인 우리는 제국주의와 야류 제국주의 국가들이 캅카스 민족들의 문제에 간섭하는 것에 반대한다. 모든 외국 군대는 카라바흐 지역을 떠나야 한다. 캅카스 지역의 민족들은 민족 간 문제를 그들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그들의 상태를 대신 결정하고 그들의 선택에 영향을 끼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이 지역의 국가들의 정치적·경제적 독립이 신장돼야 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들 민족의 운명을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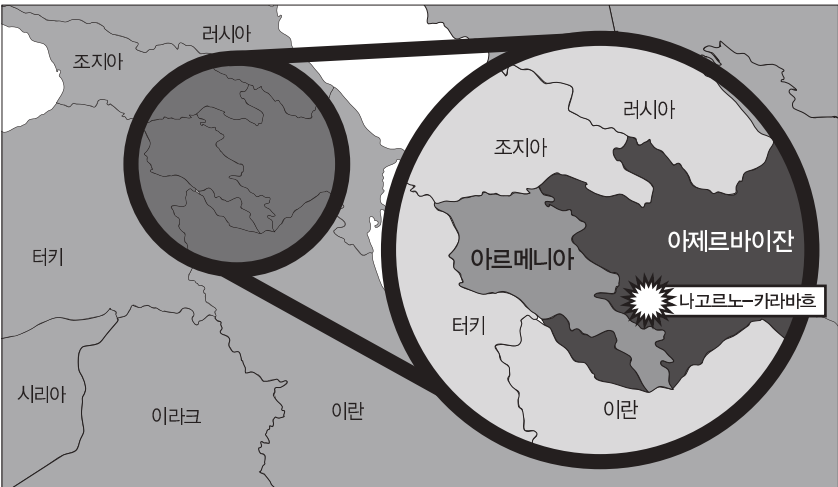
자본가 권력 타도를 통해서만 민족 간 평화와 우애를 이룰 수 있으며, 노동계급 권력만이 극단적 민족주의와 애국주의에 기반한 민족 갈등을 극복할 올바른 길을 보여 줄 수 있다.

혁명적사회주의노동자당(터키)

사회주의경향(러시아)

출처 국제사회주의경향(ST) 웹사이트

번역 김동욱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변화·미세먼지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그림자처럼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추자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려면 새 사회가 건설돼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관을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져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베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변화, 미세먼지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고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

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 자결에 반해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모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의 자기결정권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억제를 반대한다. 우리는 모든 난민을 억류 상태에서 풀려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난민 신청자들이 한국에서 살 권리를 위해 투쟁한다. 특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이 법은 '북한의 위협과는 큰 관계가 없고 오히려 남한 내 정치적 반대를 잠재우기 위한 미녀사냥'으로 권력층이 종종 사용하는 무기이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돼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혁명적 조직은 노동조합 운동으로부터 생겨나 세워질 수 없고, 오히려 자본주의에 혁명적으로 반대하는 소수(노동자뿐 아니라 청년·학생도 포함됨)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들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면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이라는 수단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점검하고,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긍되면 우리와 함께 합시다.



폴란드 사회주의자가 전한다

거대한 낙태권 운동으로 파시스트 행진이 쫓그라들다

안제이 제브로프스키

폴란드에서 올해 파시스트들이 주도한 연례 행진이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

11월 11일 독립기념일에 열리는 이 행진에는 한동안 매년 수만 명이 참가해 왔다. 그러나 지난 11일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거리에 모인 사람들은 고작 수천밖에 되지 않았다. 10년만에 가장 작은 규모였다.

올해 행진 조직자들은 예전만큼 많은 참가자들을 모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올해 행진을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들의 행렬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거짓말이다. 사실 이들은 지지자들에게 기차를 타고 바르샤바에 와 도보 행진에 참가해 달라고 뒤에서 분주하게 호소했다.

올해 파시스트 행진 규모가 이토록 작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3주간 벌어진 광범한 대중적 여성운동이 극우의 지지에 타격을 줬다. 9월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파시스트와 극단적 신자유주의자들의 연합 정당인 '자유와 독립'의 지지율은 8.2퍼센트였다.

그러나 11월 초 이들의 지지율은 고작 4.4퍼센트였다.

10월 22일 이래로 낙태권 시위가 전국의 거리, 심지어는 아주 작은 마을의 거리까지 뒤덮었다.

총 시위 참가자 수는 수십만 명에 달한다. 이번 시위는 우파가 장악한 헌법 재판소가 내린 터무니없는 판결에서 촉발됐다. 이 판결에 따르면 여성들은 심각한 기형아를 임신한 경우에도 낙태를 해서는 안 된다.

이번 판결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국무총리가 판결을 공포해야 하지만, 이는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았다. 공포 기한은 11월 2일이었다.

이런 상황은 그 자체로 승리다. 정부

는 더 거대한 시위를 부추길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정부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법을 어기거나 공포 시한을 무시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일부 병원 운영자들은 판결이 발효돼야 낙태 제한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지만 일부 병원 운영자들은 이미 낙태 제한을 강화했다.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시위는 계속되고 있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 11월 9일 바르샤바에서는 한 여성이 체포되자 시위자들이 도시에서 가장 붐비는 길목들을 봉쇄했다.

여성들의 투쟁과 파시즘 반대 운동의 연관성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파시즘 반대

극우들은 가장 가혹하고 엄격한 낙태법을 원한다. 파시즘 반대 구호들은 여성들의 시위에서 흔하게 들린다.

우파 정당인 '법과정의당'이 집권한 이래로 파시스트들은 국영 언론들을 통해 열정적인 애국자들로 묘사돼 왔다. 그러나 파시스트들은 낙태권 집회 참가자들을 물리적으로 공격한다.

이제는 거리에 나온 수많은 시위 참가자들과 집에 머무르고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여성 혐오적인 극우의 민낯을 목격하고 있다.

여성들의 시위를 공격하는 자들 중 일부는 새로 창설된 '국민방위군'의 파시스트들이다. 이 파시스트 거리 전투 조직은 로베르트 봉기에비치가 만든 것으로 그도 역시 독립기념일 행진의 대변인이자 주요 조직자다.

극우 세력은 11월 11일 행진으로 힘을 재건하길 바랐다. 그러나 이들의 "명망 높은" 행진은 처참히 실패했다.

행진에 참가하는 폭력배들은 파시스트 조직들의 회원들이거나 이와 연관된 축구 클럽의 팬들이다. 그들은 이번 시위의 수적 열세에 좌절했고 거리에서 행패를 부렸다.

파시스트들은 바르샤바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질렀다. 그들은 아파트에 조

명탄을 던졌는데 발코니에 "여성들의 파업" 배너와 성소수자 무지개 깃발이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행진은 행진 참가자들과 경찰 사이의 충돌로 끝났다. 경찰은 이들을 해산시키려고 곤봉과 고무탄을 사용했다.

경찰은 행진을 처음부터 막을 수도 있었다. 그 행진은 이미 법원에서 두 차례나 불법으로 판정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은 처음부터 행진을 막지 않았다. 5년간 '법과정의당' 정부는 극우의 절친이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보수층부터 파시스트를 아우르는 전체 우익들의 리더임을 자처하고 싶어한다.

2년 전 독립기념일 행진에서는 온갖 정부 인사들과 대통령이 군용차들과 군인들의 호위를 받으며 행진의 선두에 섰다.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파시스트들을 고무해 왔다. 그들은 앞으로도 계속 그럴 테지만 올해는 그들의 전략이 초라하게 실패했다.

우리는 이번 파시스트 행진과 관련해 두 가지 점을 강조해야 한다.

첫째, 파시스트들의 잔혹성은 그들이 실질적인 위협임을 보여 준다. 우리는 모든 기회를 활용해 그들을 막아내야 한다. 둘째, 우리는 거대한 대중 투쟁, 때로는 다른 쟁점들로도 파시스트들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경험했다.

이번 파시스트들의 행진이 크게 쫓그라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파시스트들을 무찌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을 것이다.

우리[폴란드 혁명적 사회주의자 단체 '노동자 민주주의']는 여성들의 시위에서 유인물을 뿌리고 신문을 수백 부 판매했다. 사람들은 1면을 팻말처럼 사용했다.

1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두려움이 아니라 결정권을 원한다! 낙태권을 보장하라!"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73호 / 번역 강미영

정부가 “플랫폼 노동 보호” 운운하지만 노동자로 인정 않고 조건 개선도 미흡

양효영

지난 10월 성남시가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음식 배달 라이더는 월 평균 269만 6000원을 벌었지만, 중개업체 수수료, 유류비 등으로 월 평균 46만 원을 지출해야 했다. 대리운전 기사는 월 평균 219만 원을 벌었지만 프로그램 사용료, 수수료 등으로 67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이처럼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들을 제하고 나면 노동자가 손에 쥐는 돈은 최저임금을 겨우 넘기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또, 플랫폼 일자리가 추가 소득을 벌 수 있는 부업이라는 인식과 달리, 노동자 중 78퍼센트는 다른 직업 없이 플랫폼 노동만 하고 있었다.

사회보험 가입률도 극히 저조하다. 산재보험 가입률은 음식 배달 라이더의 경우 14.9퍼센트, 퀵서비스 라이더는 20.4퍼센트, 대리운전 기사는 13퍼센트였다.

올해 들어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감소 혹은 일감 폭등 때문에 플랫폼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가 더욱 조명되고 있다. 그 때문에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기가 커졌다.

실효성

문재인 정부가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을 일부 규제하겠다고거나 사회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그런데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를 노

동자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산재·고용보험도 온전히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취약계층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해 몇몇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별도의 특례 규정을 마련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열어 두거나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비판해 왔듯이, 적용 대상을 제한하거나 차별을 뒤써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

정부가 ‘특고지침’(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심사 지침)을 개정하거나 일부 플랫폼 노동 직종에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한 것도 그런 사례이다. 여기에는 사용자가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거나 계약 외 업무를 강요하는 등 일부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그런데 문제는 특고지침이나 표준계약서가 법적 강제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특고지침의 경우 사용자가 위반하면 노동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지침 위반으로 사측을 제재하기 어렵다. 담당 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점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이 지침은 사용자와 노동자를 종속적 고용 관계가 아니라 시장에서 자유롭게 대등한 거래 관계로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플랫폼 노동자가 해고나 임금 삭감 등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 ‘불공정’ 행위로 다뤄야 하고 그에 따른 불이익 입증도 훨씬 까다롭다.

예컨대 공정위는 플랫폼 노동자가



플랫폼 기업이 뭐라고 말하든 그들의 이윤은 전적으로 플랫폼 노동자로부터 나온다

부당행위를 한 회사 외에 다른 회사와도 계약할 수 있었다면 불공정 행위로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대리운전 업체들이 배차권 제한으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노동자들이 공정위에 제소하자 공정위는 이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플랫폼 포럼

한편, 노동운동 내에서도 근로기준법을 단시간에 바꾸기 힘들다고 생각해 노동자성 인정보다는 보호 방안에 힘쓰자는 주장이 나온다.

예컨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노동자성 인정에 집착하지 말고 플랫폼 노동시장 내 규칙을 마련하고 노조 결성을 보장받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노동자성 인정은 장기적 과제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그래서 당면 요구로는 제대로 된 표준계약서 체결(부당 징계나 일방적 계약 해지 근절 등), 산재·고용보험 전면 적용, 노조 결성 권리 보장 등을 내건다.

이는 정부 대책보다는 훨씬 낫고, 조

건 개선이 시급한 만큼 지지할 수 있는 요구들이다.

그러나 노동자성 인정과 조건 개선 문제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임금, 노동시간,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납부 책임 등 조건 개선 문제는 하나같이 사용자 책임을 강제해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기에 노동자성 인정 문제를 뒷전에 두면 조건 개선도 불충분하기 십상이다.

최근 서비스연맹이 제안해 협약을 도출한 플랫폼 포럼도 이런 한계를 보여 준다. 플랫폼 기업들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해, 근로조건·보상·안전 등 노동조건을 규정하는 핵심 항목들은 알맹이가 빠져 있거나 “노력한다” 수준에 그쳤다.

따라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즉각적인 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에게 제대로 된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동시에 노동자성 인정 문제를 당면 요구로 삼고 싸워 나가야 한다.

4차 산업혁명과 공유 경제의 본질

플랫폼 기업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이 정보 기술의 혁신을 가져와, 독점과 위계가 지배하던 자본주의가 분권화된 네트워크형 경제로 변할 것이라는 주장이 유행한다.

혁신 기술이 소비자와 공급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적절하게 서로를 매칭해 줌으로써 협력에 기초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른바 “공유 경제”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플랫폼 산업은 점점 더 고도로 집중되고 있다. 국내 배달 앱 시장 규모는 2013년 3347억 원에서 2018년 3조 원 규모로 급증했다. 이 거대한 시장을 거의 두 업체(배달의 민족, 요기요)가 양분하고 있다. 어느 정도 덩치가 커지고 시장의 지배적 점유자가 된 플랫폼 기업들은 다른 대기업들과 다를 바 없이 행동한다.

플랫폼 기업들은 시장에 처음 진입할 때 낮은 가격, 적극적 프로모션 등으로 이용자 수를 늘리려 애쓴다. 그러나 이후 시장 장악력이 커지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인상하는 등 횡포를 부린다.

횡포

현실의 플랫폼 기업들은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를 양산하고 중개 수수료로 이익을 얻는다. 플랫폼 기업들은 여러 업체들이 연합해서 노동자를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착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과거에는 한 업체에 소속돼 일하던 대리운전 노동자, 배달기사 등은 이제 여러 업체에서 일감을 얻는다. 이로 인해 기업주들의 “공유 경제”는 열렸을지 몰라도, 노동자들은 노동자성을 부정당하고 특수 고용 노동자로 밀려났다.

배달의 민족을 비롯한 플랫폼 기업들은 자신들의 플랫폼 기술이 소상공인과 배달 노동자(라이더) 그리고 플랫폼 기업의 상생에 기여한다며 기업 이미지를 홍보해 왔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이윤일 뿐이다.

플랫폼 노동자는 자영업자 아닌 노동자다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우회적 보호 방안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플랫폼 노동의 성격에 관한 논쟁이 자리잡고 있다. 즉, 플랫폼 노동자를 기존 노동자와 같은 노동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영업자로 볼 것인지, 이도 저도 아닌 제3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 말이다.

플랫폼 기업들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한사코 부정해 왔다. 예컨대 미국의 리프트, 우버 등 운송 플랫폼 기업들은 노동자성 시비가 불거지자 자신들은 운전기사들을 고용한 적이 없고 운전기사들은 그저 “독립 계약자”일 뿐이라고 주장해 왔다. 한국의 사용자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플랫폼 배달, 운전 기사들은 결코 독립적인 자영업자가 아니다.

우버의 경우 운전자가 자주 접촉하지 않을 시 계정 차단 등 제재를 받는다. 계정 차단을 당하면 6개월 정도 앱에 접속할 수 없다. 세사에 어떤 자영업자가 자기 가게 문을 자주 안 연다고 6개월 영업정지를 당하는가?

스스로 노동시간을 정할 수 있는 자영업자와 달리,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회사로부터 매일 콜 할당량을 받는다.

노동자들은 이를 ‘숙제’라고 부른다. 이를 다 채우지 못하면 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무엇보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자영업자와 달리 자기 노동력의 가격, 즉 임금에 대한 결정 권한이 없다. 배달 노동자의 경우 시시각각 변하는 알고리즘에 의해 임금이 달라진다. 업체는 노동자가 많이 필요한 시기에 배달료를 일시적으로 올리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이후에 일방적으로 삭감한다. 플랫폼 기업들은 알고리즘의 근거를 영업 비밀이라며 거부한다.

이처럼 플랫폼 노동자들은 사용자의 통제 아래서 자신의 노동을 통제할 수 없고, 노동력의 대가를 지급받아 살아간다. 다른 노동자들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제3의 영역으로 보자고 한다. 해외에서 추진된 “경제적으로 종속된 비임금근로자”(스페인), “유사근로자”(독일), “준종속근로자”(이탈리아), “독립근로자”(미국) 등이 그런 사례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플랫폼 노동자

에게 충분한 개선을 가져다 줄 수 없다. 대표적인 제3 영역이 바로 한국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다. 정부는 특고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제외한 뒤 일부 보호의 필요성만 인정한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이는 매우 불충분한 미봉책에 그친다.

특고 노동자들이 여전히 노동자성 인정과 근로기준법 적용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이유이다.

투쟁 잠재력

플랫폼 노동자들이 여러 기업에서 일감을 받는다고 해서 노동자로 보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다. 사실 건설 일용직 노동자처럼 ‘전속성’(한 작업장에서 주로 일하는지 여부)이 떨어지는 노동자도 이미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가 여러 기업의 일감을 받는 것은 그들의 불안정한 처지를 보여 주는 것이지 그들의 자율성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뭐라고 말하든 그들의 이윤은 전적으로 플랫폼 노동자

들의 노동에서 나온다. 바로 이 점은 플랫폼 노동자도 기존의 노동자처럼 이윤 체제에 맞서 저항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흔히 불안정하고 파편화된 플랫폼 노동 특성상 집단적 투쟁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견해가 적지 않지만, 국내외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은 파업과 집단 행동으로 성과를 거뒀다.

2016년 영국 딜리버루 배달 노동자들은 시간당 기본급을 없애고 전면 성과급으로 전환하려는 사측의 시도에 맞서 일주일 넘게 파업해 승리했다. 2019년 미국 리프트, 우버 노동자들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항의하며 공동 파업에 나섰다. 이런 투쟁이 바탕이 돼, 일부는 법적으로도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는 성과도 있었다.

한국의 플랫폼 노동자들도 이런 투쟁의 일부였다. 대리운전, 배달 기사, 퀵서비스 노동자들도 노조를 만들고 투쟁해 왔다. 플랫폼 노동자처럼 자영업자로 부당하게 분류돼 온 롯데택배 노동자들이 파업해 승리한 것도 한 사례다. 플랫폼 노동자는 집단적으로 투쟁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일자리 불안 키우면서 기업주들에겐 막대한 특혜

정선영

최근 문재인 정부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극심한 자금난에 빠져 이미 지난해부터 산업은행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올해 HDC현대산업개발이 인수를 포기한 이후 정부는 새로운 방안을 낸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8000억 원을 투입하고, 한진칼은 이 자금으로 대한항공을 통해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의 지분(30.77퍼센트)을 사들일 계획이다.

애초의 부실과 코로나19 상황에서 심각해진 경영난이 겹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막대한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대한항공은 올해 상반기 1조 2000억 원을 지원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와 올해 이미 3조 5400억 원을 지원받았고 앞으로도 기간산업안정자금 2조 1600억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투입할 8000억 원까지 보태면 정부는 무려 7조 7000억 원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지원하는 것이다. 이 돈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주식을 모두 사들이고도 남는다.

이런 엄청난 지원을 통해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기업주들은 막대한 이익을 누리게 됐다.

조원태(대한항공 대표이사, 한진그룹 회장)는 정부의 뒷받침으로 세계 7위 규모로 덩치가 커진 항공사의 소유주가 되게 생겼다. 갑질과 막말로 유명한 한진그룹 조 씨 일가의 장남답게 조원태는 인하대 운영에 문제제기를 한 시민단체 활동가에게 상욕을 하고, 차량 뺑소니, 70대 노인 폭행 등의 막장 전력이 있다. 한진칼은 현재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런 조원태를 확실히 밀어 주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금호그룹 박삼구 일가도 막대한 이익을 누리게 됐다. 박삼구 일가는 2008년 금융 위기 직전에 막대한 빚을 지고 무리한 사업 확장을 하면서 회사를 심각한 부실에 빠뜨렸다. 아시아나항공을 담보로 빚을 늘려 다른 기업을 인수했고, 이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는 급격히 늘어났다. 그런데도 이런 문제를 낳은 박삼구 일가는 이번 합병이 성사되면 3800억 원이 넘는 지분 판매대금을 챙겨서 떠날 것이다. 정부는 박삼구 일가에게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고 지분을 고스란히 인정해 주기로 했다.

정부가 기업주들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면서 이번 합병을 추진하는 이유는 항공사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 경영



정부의 막대한 지원은 기업주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 11월 14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항공사 노동자들

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와 기업인들은 아시아나항공의 위기가 2017년 한진해운 파산과 같은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여긴다. 당시 한진해운 파산 이후 한국해운 산업의 아시아·미주 점유율은 11퍼센트에서 3퍼센트대로 급락했다. 세계 순위는 2010년 5위에서 지난해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만약 아시아나항공이 파산할 경우 국제 시장에서 한국 항공운송산업의 위상이 크게 후퇴할 것이라고 보고 이를 막으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독과점을 강화시켜 경쟁을 저하시킬 것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일각의 주장은 번짓수를 잘못 짚은 것이다. 그러나 이번 통합은 경쟁력 약화가 아닌 오히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유를 위한 이런 경쟁력 강화 논리는 그 자체로 결코 이롭지 않다.

이윤 경쟁

계다가 이와 같은 친시장적 방식의 정부 구상이 성공할지도 매우 불투명하다.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위기를 맞은 것에서 보듯 항공운송산업은 저비용항공사들의 성장과 경쟁 격화로 이미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

서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항공 기업들을 더 큰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그래서 앞서 언급했듯 정부가 이미 수조 원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지원했지만 이 기업들의 부채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는 12조 8400억 원가량으로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무려 2291퍼센트에 달한다. 지난해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에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하던 시점에 비해서도 상황은 더욱 악화했다. 대한항공도 부채는 24조 2558억 원, 부채 비율은 1099퍼센트에 달한다. 두 회사가 앞으로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단기 부채만 10조 원이다. 코로나19가 단기간에 종식되지 않을 상황에서 기업 파산을 막으려면 앞으로도 막대한 지원이 들어갈 것이다.

무엇보다 시장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합병은 노동자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윤 경쟁을 위해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는 압력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진그룹 회장 조원태는 당장은 “인력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심각한 경영난을 보자면 그 말이 지켜지리라고 믿기가 힘들다. 게다가 설사 당장 해고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금 삭감과 노동조건 후퇴 등의 압력이 뒤따를 수 있다. 이 때문에 아시아나항공 소속 노조들과 대한항공의 조종사 노조는 이번 합병을 반대하고 있다. 많은 노동자들

이 이번 합병이 대규모 노동자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 에어서울, 에어부산도 통합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번 통합은 저비용항공을 포함해 항공 산업 전반에 구조조정 압력을 강화할 것이다.

지금까지도 기업주들은 정부의 지원으로 특혜를 받았지만 노동자들은 임금삭감, 무급휴직, 정리해고 등으로 고통을 겪어 왔다.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노동자들의 70퍼센트가량이 휴직을 하고 있고, 이 때문에 대폭적인 임금 삭감으로 고통받고 있다.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경영자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노동자들의 ‘희망퇴직’을 받으며 해고 압박을 해 왔다. 이런 노동자 희생의 대가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올해 2, 3분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흑자를 기록했다.

그런 점에서 대한항공의 최대 노동조합인 대한항공노동조합이 “고용안정을 전제로 아시아나 인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힌 것은 고용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두 항공사가 통합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노동자들에게 고통이 강요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벌써부터 경제지들이나 우파 언론들은 통합 이후 노동

자 구조조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들을 내고 있다. 따라서 통합 자체를 반대하면서 정부가 국유화를 통해 노동자들의 고용을 제대로 보장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국유화해서 일자리를 보호하라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위기에 책임이 있는 기업주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정부의 막대한 지원은 노동자들을 구제하는 데 써야 한다. 이를 위해 부실 기업이 또 다른 부실 기업을 인수해 구조조정 압박을 가하는 식의 통합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완전히 국유화해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호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국유화는 얼마 전 독일 정부가 루프트한자 항공사를 일시 국유화한 것과는 다른 것이어야 한다. 독일 정부는 위기에 빠진 루프트한자를 국유화했지만 구조조정 등의 과정을 거친 후 2023년까지는 민간에 매각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가 일시 국유화를 한 뒤 경영 효율화를 위해 노동자 구조조정 등을 하고 민간에 되파는 방식은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것일 뿐이다. 한국의 대우조선해양 등의 사례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쟁취하려면 노동자들의 투쟁과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